

1월
창간준비
5호

혁명 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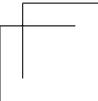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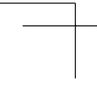
-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원칙과 방향
-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 왜 결사반대해야 하는가.
- 김정일 이후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전망
- 유럽 위기와 전 유럽 노동자혁명 전략
- 한국판 '점령하라' 운동, 쌍용차 희망텐트촌 건설을 위하여
- [현자 비정규직 투쟁]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반격하자! 투쟁하자!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혁명 혁명 창간준비 5호 Revolution

- 발행일 : 2012년 1월 12일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 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 /wrp](http://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값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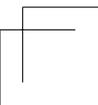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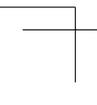


혁명

창간준비
5호

목차

- 〈혁명〉 창간준비 5호를 내며 5
-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원칙과 방향 - 양효식 7
-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 : 왜 결사반대해야 하는가. - 임천용 14
- 김정일 이후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전망 - 고민택 20
- 유럽 위기와 전 유럽 노동자혁명 전략 - 양효식 29
- 한국판 ‘점령하라’ 운동, 쌍용차 희망텐트촌 건설을 위하여 - 김명석 38
- [현자 비정규직]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반격하자! 투쟁하자! - 최병승 45
- [재능 거리특강] 0.5평 비닐 텐트 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 황지수 52
-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사민주의 - 김병호 61
- [연재 4] 계급의식 중국에서의 마오주의의 환상과 적색테러 - 오세철 68



〈혁명〉 창간준비 5호를 내며

자본가 정치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진보정당 운동의 계급협조적 본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히 드러나고 있다. 3자통합에서 빠진 진보신당 같은 또 다른 진보정당 운동 세력들은 진보정당 운동 일반이 아니라 민노당과 노심조만의 문제라고 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미 10년이 넘게 계속되어온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와 사민주의 양날개 전략의 누적된 결과이다.

과거 레닌은 독일사민당이나 영국노동당 같은 사민주의 정당을 “부르주아 노동자당”이라고 불렀다. 그 대중적 기반은 노동자계급(특히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 두고 있지만 노선과 정책, 그리고 노자 간 계급투쟁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가계급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의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혁에 머무르는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으로 유효하다.

현재 한국에서 국참당이 포함된 통합진보당은 구 민노당과는 또 다르게, 이러한 부르주아 노동자당이라고 하기에 이미 너무 공공연하게 자본가계급의 진영으로 넘어가 버린 당이다. 굳이 그 위상을 규정하자면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에서 완전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이행 중에 있는 ‘과도기적인 당’일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가 가속화하는 현 정세에서 통진당 지도부가 오로지 집권에 눈이 멀어 더욱더 우경화로 치달아 자신의 노동조합 기반(조직 노동자 기반)을 노골적으로 배신하고, 그래서 이 노동조합 기반이 대거 통진당에서 떨어져 나올 경우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의 이행이 완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것은 통합민주당과 합치는 야권대통합의 길로 설사 가지 않더라도 그러하다.)

사민주의 정당 같은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한국의 현 민주통

합당이나 미국의 민주당 같은 당들, 한나라당 같은 보수우파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과 다른 차이는 조직된 노동조합에 그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민주의 정당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보다 더 계급투쟁에 해악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 한 발을 노동운동 내에 두고서 자본가계급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 기회주의와 계급협조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에 대해서와는 달리) 노동운동 내부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으로부터 노동조합 조직노동자들을 혁명적 노동자당 쪽으로 전취해야 할 지 난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은 노동자 공동전선 내부의 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민주의 정당과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 간에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전술을 달리해야만 하는 실천적 차이이다.

통진당의 경우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 발을 노동운동 내에 걸쳐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주의성과 계급협조성은 특히 해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통진당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즉 노골적인 배신으로 대중적인 폭로가 이루어져 그 노동자 기반이 떨어져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해악성 때문에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들과 노동운동 내부에서 계속 투쟁해야 하며, 사민주의 같은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에 대한 전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전술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통진당이 더 이상 '진보정당'이냐 아니냐 하는 형식적인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천적 전술 적용이 중요하다. 물론 현재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에 저지선을 쳐야 할 당면 투쟁의 필요성 때문에 '진보정당' 규정 여부가 당장은 실천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쟁점이 계속 이 '진보정당' 규정과 배타적 지지 문제로만 제한될 경우, 본질에서 벗어나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 진보신당 같은 또 다른 의회 개량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로 전락 해버릴 수 있다.

아무튼 통진당 지지 반대 투쟁을 계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또 다른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로 유실되지 않고 명확히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로 올바른 제 궤도 위에 들어서도록 투쟁해야 할 때다. **혁명**

2012년 1월 12일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과 방향

양효식



이번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최종 파산을 맞았다. 이미 전부터 민노당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불모로 하여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열망을 배신하고, 노동자계급을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의 들러리로 전락시킨 데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더니 이제 마침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허울마저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자본가 정당과 아예 통합하는 길로 가버리자 급기야 민주노조운동 내부로부터 배신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 간부 활동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1천인 선언운동'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 서명을 조직하고 1월 14일 선언자 대회와 1월 31일 민주노총 대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천인 선언운동은 1월 5일 기자회견 선언



울산 1천인 선언 기자회견 모습

문을 통해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창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므로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정치방침을 새롭게 정립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가 정당과 독립하여 노동자의 이해를 일관되게 대변해야 함을 주장해 왔고 또 그렇게 투쟁해 온 사회주의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선언과 제안을 환영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운동이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투쟁 일선에 있는 모든 노동자 투사들 사

“이 선언운동이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투쟁 일선에 있는 모든 노동자 투사들 사이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분투할 것이다.”

이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분투할 것이다.

먼저 당면한 과제로서, 우리는 1월 31일 민주노총 대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안이 철회되도록 ‘1천인 선언운동’ 참가자들을 비롯하여 배타적 지지 반대투쟁을 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공동전선을 펼 것을 호소한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일 대대장에서 필요한 모든 행동을 펼쳐야 할 것이고, 한편 이를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대대 전까지 조합원들 사이에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서명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조직해야 한다. ‘배타적 지지 반대’ 공동투쟁을 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러한 대중적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자.

다음으로, 대대 대응만이 아니라 대대 이후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데 대한 근본 평가와 함

께, 어떠한 원칙과 방향 위에서 다시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를 조합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조직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과 일선 계급 투사들이 평가와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공장별 각급 대중단위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 및 집회 선전전 등 다양한 정치캠페인을 펼치자.

* * *

이하에서는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그 동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 및 현 시기 정세적 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점에서 제기해 본다.

기본 원칙과 방향

첫째,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열망은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극복하고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계급적 정치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하고 만 것은 이미 국

가 정당과 손잡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시켜 온 데서 비롯한 것이다. 진보정당 지도부들이 민주당 국참당과 함께 하는 ‘야5당 중재단’ 등을 통해 노동자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오면서 이미 진보정당 운동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국참당과의 통합은 이러한 자본가 정치세력에 투항해 온 일련의 배신 과정의 종착점일 따름이다. 따라서 자본가 정당과의 단절은 민주대연합/야권연대와의 단절로까지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는 당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현 민주노총처럼 노동조합이 민주대연합과 야5당 연대(‘정책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선대본 참가나 지자체 공동정부 구성까지)를 지지하고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것은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금속, 공공 등의 산별노조 및 연맹, 그리고 대공장을 비롯한 단위노조들에서도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은 조합 지도부들이 야권연대를 지지하는 것을 비판, 탄핵하고 이러한 계급협조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조합을 야권연대의 꼬리로 전락시키는 조합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에 맞서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을 바로세우는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들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가 노동자들의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따라

서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조합을 야권연대의 꼬리로 전략시키는 조합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에 맞서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을 바로세우는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둘째, 의회주의와 양날개 전략을 극복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그 동안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것은 상층 명망 인사들을 국회와 지자체에 당선시키는 것으로 노동자 정치가 왜곡되고,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들을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들러리로, 표 찍는 기계로 전략시킨 데 있다. 96-97 노개투 정치총파업처럼 노동자들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가릴 것 없이 모두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정치투쟁은 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각각 나누어 맡는다는 이른바 양날개론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투쟁을 방기하고 대리주의로 일관하는 의회주의와, 정치투쟁 및 계급적 연대와 담쌓는 조합주의를 재생산해 왔다. 이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왜곡되고 후퇴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해방의 기치와 혁명의 전망이 상실되고 민주노조운동도 관료화와 개량화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99% ‘점령하라’ 운동에서 보듯 대중들의 반자본주의 정서와 혁명적 상상력이 솟구치고 있고, 그로부터 대중 직접행동과 대중총회 같은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함께 기존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의회 대리주의 및 관료화된 공식 노조운동에 대한 환멸 속에서 그것들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대안적 운동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도 관료화되고 박제화된 공식 노조운동을 넘어 대중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직접행동이 희망버스 희망텐트 운동, 촛불시위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의 지침 없이도 기륭, 동희오토, 흥익대청소, 한진, 재능, 쌍차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연대운동이 펼쳐져 왔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이 감히 내걸지 못했던 슬로건과 요구들을 과감히 제기하고 있다.

그 주된 성격에서 기층 프롤레타리아 운동

인 이 운동들은 현재 야권연대 세력들이 ‘반MB 정서’를 내세워 대세 몰이하고 있는 선거심판론에 대한 현 시기 적극적인 투쟁 대안들이다. 이 운

“의회주의와 양날개 전략, 반MB 선거 심판론을 걷어내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운동들이 총파업 등 조직노동자들의 대중투쟁과 결합하여 자본주의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노동자혁명의 전망을 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동들이 공식 노동조합 체계 밖에서 노조 지침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운동이라는 이유로 ‘노동운동’과는 상관없고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일 주체일 수 있음을 부정하는 편협한 조합주의는 올바른 노동자 정치와 양립할 수 없다. 지난 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 중 하나인 양날개 전략 같은 것에 다시 문을 열어놓는 관료적·조합주의적인 정치세력화와는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의회주의와 양날개 전략, 반MB 선거심판론을 걷어내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운동들이 총파업 등 조직노동자들의 대중투쟁과 결합하여 자본주의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노동자혁명의 전망을 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떻게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설 것인가 하는 정치원칙을, 정세를 매개로 하여 해당 시기의 정치투쟁의 과제로 제시하

는 것이어야 한다. 선거는 이러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투쟁의 수단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따라서 매시기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 등 각각의 선거방침은 이러한 정치방침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때 그때 실용적인 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대중투쟁을 선거에 종속시키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야합하는 의회주의는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방침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은 모두 선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셋째, 선거방침을 정치원칙과 정치방침에 종속시키고, 2012년 공황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총파업 조직을 통해 수세를 공세로 전환시켜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은 어떻게 노동자가 정치(투쟁)의 주체가 되고, 어



의회주의와 선거주의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노동자가 선거에서 어느 당을 -- 그것도 의회주의 정치세력들 중에 -- 지지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협소화되고 있고, 나아가 배타적 지지 방침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지마 지지’로까지 왜곡되고 있다. 의회에 진출해서 다수당이 되는, 의회주의적 선거주의적 목적을 위해 오직 그 존재 이유가 있는 ‘배타적 지지’는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이 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말할 것도 없고, ‘배타적 지지’ 그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선거방침이 정치방침에 종속되어야 한다면 선거방침에 대한 각급 노동조합 단위에서의 토론을 단순히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의 문제로 제한하지 말고 현 시기 노동자 정치투쟁의 과제, 정세와 투쟁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2012년 정세적 대중투쟁 과제에 복무하며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앞당기는 선거투쟁 목표와 요구들을 정식화하고 총대선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2012년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공황이 격화하고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가 전면화함에 따

“자본주의 정치·경제 위기가 가속화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저항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정치총파업을 성사시켜 대대적인 반격의 물결을 일궈내야 한다.”

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대중투쟁으로 촉발되느냐를 가르는 정세일 것이다. 2012년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이러한 정세 속에서 만들어야 하며, 정세의 과제를 어떻게 받아 안느냐에 따라 그만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2012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설사 현재로선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2012년 정세의 엄중함 때문에 누구도 총파업 성사 어려움을 들어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세적으로 총파업이 절실하다. 2012년 예상되는 자본의 총공세를 개별 투쟁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면, 정치총파업으로 그 동안의 패배와 수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정세 반전을 일으켜내야 한다. 자본주의 정치·경제 위기가 가속화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저항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정치총파업을 성사시켜 대대적인 반격의 물결을 일궈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과 기초 하에서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앞당기는 2012년 노동자계급 선거투쟁 10대 요구(안)>를 제출한다. **혁명**

2012년 노동자계급 선거투쟁 10대 요구

-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노동제를 통한 실업 해소!
- △ 1%만을 위한 한미FTA 폐기!
- △ 물가 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 △ 등록금 폐지, 대학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은행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의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 - 왜 결사반대해야 하는가

임천용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국참당, 노심조의 통진당으로의 통합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 문제를 놓고 대대에서 격렬한 투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노총은 기간 민노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 통합으로 민노당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통진당이 터줏대감처럼 들어오는 길을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이 터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참당 같은 노골적인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기를 꺼리지 않는 민노당과 노심조의 반노동자적이고 배신적인 행위가 통합을 계기로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지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통합 이전부터 민노당은 국참당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고, 노동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동원하며 노동자 투쟁이 자본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리 행동했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통진당으로의 통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투쟁은 개량주의 정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진행한다는 사민주의 본래의 분



업체제에도 다가가 보지 못한 채로 민노당은 자본가계급의 품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정당을 통한 정치투쟁은 자본가 정당과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고, 노동조합을 통한 경제투쟁조차도 자본주의 위기로 인해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노당은 오히려 노동자 투쟁을 중재하고 관리 통제하려 했다.

자본가 정당에 대한 학습효과

노동자들이 통진당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통진당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좌측 우들의 결과 한 달 사이 통진당 지지율이 10% 넘게 빠지고 1월 초에는 2%대에 머무르고 있다. 통진당은 한 달 동안 자본가 정당들의 나쁜 짓을 금방 배워버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 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도 의원직을 연달아 사퇴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민노당 등에서 선거비용 낭비, 주민과의 약속 위반 등을 거론하며 비판해 왔던 부분이다. 이 문제에서 민노당 출신 쪽의 입장은 반한나라당 입장에서 당선되기 위한 노력, 정당은 도덕적 시민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정면돌파'를 감행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도위원이 적은 국참당 출신 쪽에서는

시도 의원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경훈 현대차 전 지부장은 통진당 후보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노당 당원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파괴자로 나섰고, 이제는 통진당 후보로 나서서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경훈 예비후보는 명함에 현대차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다. 그러면서 이경훈은 “어려운 다른 사업장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출신”인 자신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자신감은 자본가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자본에게 길들여진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공통된 것이기도 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구 민노당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진당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당선가능성과 출세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어서 이 노동자 배신당, 자본가 정당한테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다.



이러한 정당, 이러한 인물들이 자본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깊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노동자들에게 자행할 행태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온갖 노동악법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피동적으로, 한나라당의 압박으로 밀려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행세했다. 대자본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했던 노무현 정권의 실체가 우유부단, 핑계의 배경이었다. 반면 구 민노당 출신 인사들의 단호함은 당 내부의 투쟁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향해질 경우 그것의 파멸적 효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단결”(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자본가 꿈꾸니로의 단결),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단결”(실제로는 자본가 야당으로의 단결)을 신주처럼 모시면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제압한다. 이처럼 과대한 자기망상증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의 통진당 지지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은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노당 대신에 통진당을 민주노총의 공식지지



정당으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은 찬성도 반대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서 행동에서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진행하고 있고, 통진당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 관료들을 예방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의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노동자들 속에서 공고히 하고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을 때에만 통진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한편 통진당의 경우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통해서만 노동자 탄압당인 국참당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의 수많은 노동조합 관료들이 했던 것처럼, 노동조합 관료들의 출세주의는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당의 이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자본가 정당 가입은 과거의 경우 배신, 투항이 많았지

만 요즘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요즘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배신적 관료들의 행보는 자본가계급의 파견자 역할을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본가 정당에 들어가 출세하는 것은 노동자운동을 적당히 통제할 것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보답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노동조합 관료들의 개인적인 이러한 배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의 반노동자적인 배신행위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현재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은 민주노총 전체를 자본가 정당에 불과한 통진당에 봉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이 번갈아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지지를 선언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당

들을 찍을 것이라고 겁을 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통진당과 같은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궤변을 내세운다. 이러한 관료적 논리는 민주노총이 물질, 인적으로 민노당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못지않게 ‘노동자 탄압당’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왜 막을 수 없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결정할 1월 31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2월 중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로 시작한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 제안” 이후, 20여일 만에 152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1월 5일에는 민

주노총 대회의실에서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기층 조합원까지 조직하고 1월 14일에는 선언자 대회를 개최해서 향후 대응을 전개해 나



가기로 했다.

선언자 대회 선언문은 첫째,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둘째, 통진당은 조합원을 무시하고 배제하며 탄생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셋째,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정치방침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선언운동의 의의

이러한 선언운동이 갖는 적극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 민노당과 국참당 통합 시도 때 전개된 통합반대 선언 운동이 민노당 내부 투쟁 성격이었다면, 이번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은 민주노조 운동 차원에서의 노골적 배신 정당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자가 개량주의 정당 내부의 노선투쟁이었다면 후자는 통진당이라는 자본가 정당에 대한 정치투쟁이라는 의의가 있다.

민노당이 국참당과 합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노동자 배신정당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수 년 동안 쌓여온 민주대연합 노선을 기반으로 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선언운동은 이미 민주대연합이라는 노선으로 실질적 정리단계에 들어선 민노당 내부 투쟁에 계급의식적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 개입이 불필요했다면, 이번 투쟁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 속에서 전개되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은 통진당만 아니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반노동자적 정치세력인 통진당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공동의 투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선언운동 내부의 정치적 경향이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이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의 반노동자적 정치에 대항한 당면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순 없다. 선언문의 경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해 토론의 과제로 남겨놓고 이후 전망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

극복해야 할 한계

조합원 선언운동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지난 15년간의 처절한 몰락은 자본가 정당과 철저한 단절을 할 수 없는 시민주의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입장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진당의 주요한 세력으로 있는 민주노총 “우파관료”들에 대한 “좌파관료”들의 투쟁이 불철저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노동조합운동에서 관료적 이해가 대체로 ‘좌우’ 한 통속일 수 있다는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파 진보정당과 차별화된 좌파 진보정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동시에 지지하기를 바라는 기회주의적 방침, 결국은 통진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시킬 꿈수들이 들어서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당면한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조합원 선언운동에 사회주의자들, 계급의식적 노동자들이 함께 조직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통진당에 가입해서 노동자들이 그러한 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에 반대하고 반노동자적인 정당에 대해 어떠한 지지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명**

김정일 사망 이후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전망

고민택



김정은이 김정일의 사신을 보다

역사의 필연은 그 속에 수많은 우연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일의 죽음은 자연사로 '공인'되고 있어, 죽음 그 자체는 비정치적인 우연적 일이지만, 그의 죽음이 앞으로 불리일으킬 파장은 역사의 필연과 맞물려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띠 수밖에 없다. 그가 사망함으로써 가장 일차적인 관심은 새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체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김일성 체제와 김정일 정권 사이에는 연속성이 지배했다. 이제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정권 사이에서도 과연 연속성이 지배적으로 작동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다음으로 보다 포괄적인 관심사는 김정일 없는 또는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 것인가다.

허탈감

김일성 체제는 소련 붕괴, 동구의 몰락, 냉전 해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격동 속에서 체제와 정권을 지탱해 왔다. 김정일 체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북핵문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역시 체제와 정권을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북은 밖으로부터, 특히 미국이 가하는 압박과 봉쇄에 시달렸다. 그 속에서 북 체제와 정권이 살아남은 것은, 북 체제와 정권의 성격이야 어떻든 그 자체로는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 경우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미국의 직접침략을 당했지만, 북은 핵 실험을 연속적으로 감행하고 오히려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은 세계공황, 북아프리카/아랍 혁명, 중국의 G2로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조만간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연이어 일어날 예정이다. 북으로서도 김정은을 정점(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으로 한 권력 다지기가 우선적 과제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 기간까지는 북을 둘러싸고 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현재까지 모습으로만 보면 김정일의 죽음은 매우 싱겁게(?) 정리



김정일 사망에도 불구하고 아무일이 없어 당황해할 자들

되고 있다. 그의 죽음을 전후로 마치 무슨 커다란 일이라도 벌어질 것으로 관측했거나, 그러기를 내심으로 바랐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허탈감마저 느낄 수 있는 정황이 펼쳐지고 있다. 위로부터의 붕괴론도 아래로부터의 도전론도 당분간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수많은 인상비평이나, 권력 핵심부에 대한 관전평이 당분간 지면과 전파를 메꿀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균형

북을 둘러싼 정세의 핵심 요소는 ‘이해의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독자적 힘으로 ‘이해의 균형’을 깨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을 둘러싼 정세는 계속해서 이 같은 성격과 특징이 반복적으로 지속돼왔다. 사실 북 체제와 정권이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북 체제와 정권 자체가 정당하거나 힘을 보유하고 있어

서가 아니라 북을 둘러싼 제국주의 사이의 힘의 균형이 팽팽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사이에 북의 인민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 했다. 즉 북 체제와 정권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민을 희생양으로 동원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이 근간을 이룬 가운데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테이블을 통해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북미 직접대화가 또 때로는 남북 사이의 대화가 간간히 있었지만 6자회담 자체를 대체할 정도의 것은 되지 못했다.

그런데 6자회담이 ‘북핵문제’ 자체를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다. 오히려 시쳇말로 노름판의 판돈을 점점 더 키워온 것이 유일하게 한 일이다. 6자회담 기간 중에 ‘북핵문제’는 계속해서 확대재생산 되어 왔다. 북은 그 사이에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북핵’을 관리/저지하기는커녕 반대로 NPT(핵확산저지협정) 정책에 타격만 입었다. 중국 역시 6자회담 의장국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 정책에 시달리고 있는 북에 대한 후견인 노릇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역할을 철수했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 기간 동안 ‘북핵문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김정일과 장성들

미국으로서는 자기당착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 9. 11 사태 이후 미국은 대 ‘테러와의 전쟁’을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핵’(북이 핵을 보유하고 자 하는 의지를 갖거나,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되었다. 중국으로서는 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내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그를 이용해 미국(북에 대해서도)에 대응하는 지렛대로 삼았다. 이명박을 비롯한 한국의 보수 세력도 ‘안보정권’을 유지, 창출하는 데 그만한 것을 달리 찾을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북인데, 북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언제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으며, 내적으로는 ‘선군정치’, ‘강성대국’의 축으로 삼아왔다. 김정은 정권이 적어도 겉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익의 균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차회담이 진행되었지만 무위로 끝났다

동상이몽

그러나 북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위와 같은 '이익의 균형'은 탄탄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동상이몽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균형이 깨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급격히 기울고 있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미국은 여전히 중동(아랍)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있다. 중동은 미국에게 패권 유지를 위한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이다. 석유(에너지) 장악은 미국에게 남은 마지막 보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직접적 군사행동을 통해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미국의 의지를 확고히 경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하면 북 또는 '북핵문제'는 중동에 비해 그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과 직접 부딪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으로서도 동시에 두 지역을 모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오바마가 집권 기간 내내 북에 대해 사실상 현상 유지 정책을 썼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공감이 맞았던 것은 오히려 오바마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거기에 한미FTA까지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수확까지 거두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하거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2~30년 동안은 오직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에 국가의 사활적인 운명을 걸고 있다. 그러기 위해 최대한 미국과의 대립이나 갈등을 가급적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데에만 급급해 하지는 않는다. 그러기에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며 중국 자신의 국력 또한 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것까지를 감수하거나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 하나만으로도 중국은 손쉽게 미국에 대해서나 북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남측의 이회호, 현정은 일행의 북한 김정일 조문단

한국은 지난 15년 이상 선 ‘북핵 해결’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과, 북과의 관계 개선을 ‘북핵 해결’과 연결하여 동시에 진행하려는 자유주의(일부 진보 세력 포함)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됐다. 그 동안 어느 세력도 절대적 지위는 물론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6자회담 참가국 중 한국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가장 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지위와 역할을 6자회담 속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동자투쟁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치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노동당이 분당에 이르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제국주의 사이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아직 미약한 데 따른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다.

북은 체제 유지와 정권 사수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왔다. 이를 위해 서방과의 관계 개

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까닭에 일관되게 ‘반제’ 또는 ‘반미’를 견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이 ‘반제’ 또는 ‘반미’를 내세우는 것은 압박에 대한 즉자적 대응이거나 나아가 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북은 ‘핵 포기’ 외에도 ‘개혁, 개방’에 대한 압력도 동시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는 인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북으로서는 ‘핵(무기)’을 지렛대로 삼아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고자 하지만 제국주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벼랑 끝 전술을 되풀이 하는 이상의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핵(무기) 개발과 핵보유 정책을 통해 또한 권력의 세습을 통해 이제까지 체제와 정권을 유지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북의 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최대 원인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 체제와 정권은 위기를 북 인민에게로, 미래로 계속해서 전가시켜 왔으며, 증폭시켜 왔을 뿐이다.

불안정, 불확실, 복잡함

지난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6자회담과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

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 불확실, 복잡함에서 한 치도 진전된 것이 없다. 이제는 그에 덧붙여 김정은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그것들이 훨씬 증폭될 가능성만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세계공황이라는, '북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핵폭탄이 등장한 상태다. 사실 지난 시기의 정세도 그 근본에는 세계경제의 전개 과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다만 한반도의 경우에 경제적 상황이 곧바로 대입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정치, 외교, 군사적 긴장이라는 범주가 주된 힘으로 작동하면서 경제 문제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당분간 그와 같은 지형과 구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가 나름대로 일관된 정책을 펴온 것과 달리 김정은 정권의 행배는 아직 궤도에 올라있지 못하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또는 정권의 안정을 꾀하기도 전에 세계공황이라는 쓰나미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 측면이야말로 이제까지 술하게 제기됐던 북 붕괴설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전망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령 김정은 정권이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일 정권 시기와 같은 정치적 안정을 찾는다 해도 김정은 정

권이 맞아야 할 세계공황 앞에서는 그런 안정이라는 것이 하나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다시피 북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한 구성 부분이다. 북이 사회주의냐, 모종의 자본주의냐는 논쟁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의 경제는 전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자본주의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북의 경제는 중국이라는 젖줄에 생명줄을 대고 있다. 내적으로는 이미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 시스템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무너진 상태다. 가장 기본적인 식량 자급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유 시장이 그나마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다. 아니 국가가 인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통제 자체를 오히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SK 최태원 회장이 장사꾼답게 믿을 수 있을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

북의 인민은 현재까지 정황으로만 보면 정권에 대한 도전이나 투쟁보다는 오히려 각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그렇다면 아래로부터의 분노나 불만이 거대한 형태로 폭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를 두고 북의 정권이 안정되어 있다거나 인민에 대한 장악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분석일 뿐이다. 북의 체제와 정권은 매우 불안정하다. 어떤 면에서 불안정 자체가 안정을 유지케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정도다. 북 정권과 인민은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일정한 용인과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동거해야 하는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는 불안정, 불확실 외에도 복잡함을 또한 그 특징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봤듯이 균형과 동상이몽이 공존하는 속에서 어느 누구도 선불리 현재의 긴장을 먼저 깨고 나오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역시 말했듯이 세계공황이라는 초유의 정세까지 겹쳐 있어 이제까지 구도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쉽게 행보를 하기도 만만치 않다. 북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관련국들의 정치 일정으로 보나, 김



과거의 혁명가들이 3대세습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정은 정권의 내적 사정으로 보나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누구든 현상유지 이상의 상황을 만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수와 전망

한국 노동자계급은 물론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북 체제와 정권은 한국 및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역량과 특히 북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다. 북 체제와 정권이 비록 보다 더 흉폭한 제국주의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라서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제국주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북 체제와 정권이 ‘반제’, ‘반미’ 세력이라거나, 북과의 통일을 위해 ‘민족적’, ‘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통일 한국

을 통해 한반도 강국으로 부상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태도는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오직 노동자국제주의의 입장에 설 때만이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일관되게 구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핵’ 일반에 대한 부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구별하지 않고, 즉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 정치에서 엄연히 ‘핵’ 일반에 대한 폐기가 아니라 단지 ‘북핵’에 대한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이를 보지 않는 것은 단순한 생각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이 ‘북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단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현실성과 복잡성이 존재한다. 노동자계급은 이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반대를 가장 우선적인 요구로 걸어야 한다.

한반도는 현재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문제인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것은 지배계급 사이의 쟁점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평화 상태로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계급 사이에 평화란 없다. 부르주아 독재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계급전쟁, 즉 혁명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적 이행을 특별한 정세 국면에서 바랄 수는 있겠지만, 계급전쟁, 혁명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평화주의’는 결국 노동자계급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자본과 국가의 탄압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 한반도, 동북아에서 벌어질 정세 전망에서의 최대 변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공황이 끼칠 영향이다. 지금까지 북을 둘러싸고 형성된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이해 균형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 북을 포함하여 한반도, 동북아에서도 제국주의 사이에 첨예한 경쟁과 대립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북이 더 불안정해 질 수 있겠지만, 그 불안정이란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불안정에 비하면 사실 작은 변수에 불과하거나, 아무런 변수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 현실적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태도이다. 만약 한국 노동자계급이 한반도 차원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최대의 변수이자, 동력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 노동자계급은 2012년 정세에서 ‘야권연대’, ‘민주대연합’, ‘선거심판론’을 심판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직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핵심 키는 바로 한국 노동자계급이 쥐고 있다. **혁명**

[성명] 김정일 이후 “한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기본태도

북한 김정일의 사망으로 한반도가 불안정한가? 물론 좀더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현 세계대공황의 심화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로 인해 근본적으로 한반도가 불안정해진 것에 비하면 표피적인 사건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세계대공황은 정치·군사적 불안정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심급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 세계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심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들 간의 패권 다툼을 격화시키고 자본가 국가들의 군사주의와 전쟁 물이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김정일의 사망은 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이미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심대하게 불안정해져버린 상황에 단지 돌 하나 없어놓는 문제일 것이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다시 “한반도 평화” 담론이 무성한데 좌파를 자처하는 세력들조차 이 평화주의 담론에 포획되고 있어 문제다.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장하다가도 ‘한반도 문제’ 앞에만 서면 자본주의 현실과 체제 위기 정세에 눈을 감고 마치 지배계급들 간의 협정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 “군축”, “핵군비 철폐”를 외치는 공상주의(유토피아주의)가 만연해 있다.

레닌이 클라우제비츠를 즐겨 인용하며 말했듯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고, 정치의 집중화된 표현이다.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전쟁 문제를 정세와 정치투쟁으로부터 떼어내 '전쟁 대 평화'라는 추상적이고 메마른 도식에 의존하여 제기하는 "한반도 평화" 슬로건은 좌파와 노동운동 진영에서 확고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세계대공황과 이로 인한 제국주의 전쟁 위협 및 군사주의 격화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군축', '핵군비 철폐' 같은 평화주의 슬로건은 과연 어느 계급의 슬로건일 수 있는가?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그로 인한 자본의 위기 전가 총공세 정세에서 한반도 불안정은 노동자계급에게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이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냐'의 문제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의 과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강령에 바탕한 '군비철폐'론은 노동자계급의 무장을 축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무장을 설교하는 반동적 노선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좌파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것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사실상 사회주의혁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자에 불과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일 따름이다.

이 점은 김정일 사망에 따른 "한반도 평화" 의제가, 다른 계급투쟁 의제를 대체하고 주변화 시키려고 하는 민족주의 세력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슬로건이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슬로건일 수 있다면 왜 "한반도 평화"가 다른 계급투쟁 사안들과 결합하여 상호 상승강화하기는커녕 언제나 여타 계급투쟁 현안들과 대립하고 이 현안들을 대체해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1%를 살찌우고 99% 노동자 민중들을 다 죽이는 한미FTA 의제도, '정리하고 없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 희망텐트 의제도 "한반도 평화" 앞에서 현재 다 묻혀 버릴 위협 속에 있다. 김정일이 죽든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든,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노동자운동과 계급투쟁은 전진해야 한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향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남북의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한반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향해서.

세계화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제국주의 경쟁 격화

자본주의는 30년간의 세계화 시기를 거쳐 거의 전 세계를 비집고 열어젖히는 데 성공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 심화와 제국주의 경쟁 격화의 현 시기에 뼈다귀 하나를 놓고 다투는 굶주린 이리떼처럼 단 한 뺨의 시장도 남김없이 제국주의 간 쟁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는 북한을 개척할 “마지막 변경지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 등 이 동북아 지역의 제국주의 세력들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자기 차지라며 쟁탈전을 벌이고자 달려들고 있다. 이들 모두가 “자신의” 자본주의가 북한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다투고 있다.

중국 자본주의와 북한

북한은 중국 자본주의를 매개로 해서 이미 세계 자본주의 속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 사적 소유와 사기업의 출현이 중국을 매개로 한 동안 진행되어 왔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든 않든 간에 북한이 중국의 후견과 투자를 더욱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공산당은 북한의 경제 자유화와 개방을 계속 권유해 왔는데 이는 단지 북한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이 그 과정에서 중국 자본주의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지배계급은 끊임없이 북한에 무역 및 관광 파견단을 보내는 한편, 수십 톤의 산업 폐기물을 북한에 버리며, 중국 기업들이 알짜배기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계약을 따내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800마일이 넘는 북-중 접경지대를 따라 북한 기업기층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강제하고 싶어 해도 중국이 절대로 대북 금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개혁 개방’ 모델로 북한을 획득하는 것이 중국 자본주의 팽창에 긴요한 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 핵을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

북한 지배계급 내부의 향배

경제의 국유부문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 현상 유지를 바라는 집단이 확실히 존재한다. 반면 다른 집단은 ‘중국식 길’을 채택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이 경향이 최근 시기에 강화되어 왔다

심지어 남한과의 화해와 나아가 (흡수)통일의 유혹을 받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유자산을 매각하고 경제를 남한 자본 및 미국 자본에 개방하여 그 수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세력이다.

최근의 북핵을 둘러싼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서방에 손을 뻗으려는 시도, 또는 적어도 중국 지배계급의 지원을 확실하게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를 획득하려는 시도의 성격이 강하다.

과제와 전망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었고 노동자 민중의 대표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보했던 1917년 혁명 직후의 소비에트 권력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전체주의적 관료독재이며, ‘일국 사회주의’를 빙자하여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 체제일 따름이다.

남한 노동자혁명과 결합하는 북한 노동자혁명만이 유일한 현실적 해결책으로, 이를 통해 남북의 자원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다. 김정일이 살았든 죽든, 김정은이 권력승계를 하든 못하든 혁명적 노동자계급운동의 강령과 목표는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노동자혁명이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한반도 노동자공화국과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2011년 12월 28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유럽 위기와 전 유럽적 노동자혁명 전략

양효식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경제위기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70%인 198조원을 상반기에 풀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2012년 상반기에 일차로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가, 그리고 이어서 “자본유출과 실물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여기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쏟아 부은 바 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자금경색으로 인한 은행도산 사태나 외환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유로존 위기와 2012년 한국

2009년 당시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사정이 훨씬 더 안 좋다. 2009년과 달리 지금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 자본가 정부들 자신들이 거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어 더 이상 재정을 쏟아 부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부채 위기에선 벗어나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 만기 도래가 집중되어 있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꺾꺾꺾꺾 돌아가고 있다. 특히 유로존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등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제2차 신용경색”이 발발하여 자본 유출, 즉 유럽계 자금이 한국에서 대거 이탈하면 은행들의 급격한 자금경색 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이 1천조원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당겨 부실 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2009년처럼 정부 재정

들, 즉 한 마디로 금융자본가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앞 다퉈서 집행하고 있다. ‘금융 안정화’ 정책의 필연적 결론인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은 유럽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공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유럽 재정동맹(fiscal union) 논의를 위해 지난 12월 8-9일에 있는 브뤼셀 EU정상회담의 결정사항을 보자. 각국의 구조적(즉 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0.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는 가맹국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회복을 꾀한다는 케인스 주의적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대신에 국채 등 금융자본가들에게 빌린 정부부채를 모두 갚아주기 위해 복지비 등 정부지출 삭감과 간접세 인상 등 서민중세, 공공자산 매각을 단행한다는 결정이다.

결과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일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지출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유럽 각국의 헌법 조항으로 집어넣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단기적인 비상조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금융과두제와 부자들을 위해 경제를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독일 총리 메르켈이 “우리는 위기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로 이용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

유럽의 쌍둥이 위기

유럽 ‘정상’들은 이런 심대한 결과를 내포하는 결정들을 어떠한 국민투표 절차도 생략한 채 자신들끼리의 협정 서명으로 마무리지어 버렸다. 이러한 합의가 정상들 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거의 만장일치였다는 사실은 이들 선출된 정치인들이 99% 국민들이 아니라 1% 자본가계급의 압력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자본가들, 거대기업의 사주들 및 CEO들 같은 한 줌도 안 되는 1%들이 브뤼셀에 모여 긴급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개의 위기가 지금 동시에 터져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노동자계급을 (그리고 중간층도) 희생양으로 하여 이 두 위기를 해결할 비용을 치르도록 이제 1%들이 나서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를 발하고 전투대형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위기 중 첫 번째는 국가부채 위기이다. 몇몇 유럽연합 나라들은 2008년 공황 이전에도 이미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2008년 이후부터는 세수가 급감하고 실업수당이 급증하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와 수출 부양을 통해 경

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프랑스계 자본가들은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 유로화가 붕괴하면 독일은 유로화에 불박이로 달려 있는 환율 상의 이점 — 유럽 시장을 상대로 하는 독일의 거대 수출 대기업들에게 그 동안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 을 잃어버릴 것이다.



붕괴하는 EU

한 발은 더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에서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명임을 세계의 여타 지역에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위기에 대한 노동계급운동 내 잘못된 대응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지도력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주의가 아니라 야만으로 가는 길을 닦는데 일조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장 높을 수 있다.

탈유로화 세계는 유럽 국가들 간의 적대적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을 첨예하게 만들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세계무역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세계의 정치 경제적 갈등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유럽 내 동맹관계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같은 글로벌 강대국들의 영향력 다툼이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운동 내에서 제출되고 있는 “해결책들”

현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 체제 위기의 심화는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정치 일정에 빠르게 올려놓고 있다. 현재 유럽은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고 이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선두에 있는 지역일 것이다. 아마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보다 적어도

유럽 노동계급운동 내 전통적인 개량주의가 문제이지만, 현 유로존 위기와 관련하여 좌익민족주의가 계급투쟁에 미치고 있는 파멸적인 위험성도 못지않게 심각하다. 개량주의 세력들은 EU의 개혁과 함께 긴축 대신 유로본드(유로존 나라들의 공동 국채)의 발행을 통한 재정동맹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정통합이 새로운 유럽 제국주의 강대국으로(그것도 일체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노골적인 금융과두정으로) 가는 일대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



사르코지와 메르켈

가 되어야 한다. “이 재정동맹 조치들을 법적화할 지 여부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전 유럽에 걸친 국민투표 실시 캠페인이 오는 몇 달 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무엇보다 국민투표가 유럽 금융과두제의 EU 프로젝트 핵심에 깔려 있는 ‘민주주의 후퇴’ 기도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럽연합 조약(EU Treaty)이든, 각국 법령이나 헌법에 대한 그 어떤 “균형예산” 개정조항이든 이것들은 가장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뒤에 국민들에 의해 직접민주주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 없이 정부나 의회가 이것들을 채택해선 안 된다. 각국 예산도 EU 관료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한다.

이 투쟁의 일부로, 재정동맹 안과 각국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전 유럽적 규모의 저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할 회의체(집담회 등)로 유럽 전체의 모든 노동운동과 좌파, 혁명 세력, 반자본주의 세력들이 결집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일국적으로 고립된 투쟁으로 후퇴하거나, “독일-프랑스가 지배하는 EU에 맞서” 반동 민족주의 세력들과 동맹을 맺거나 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를 대신할 진보적 대안이다.

이 같은 집담회에서 대안적 유럽 건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유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긍정적인 것(국경 폐지, 더 큰 통합)은 지켜내는 한편 반대로 잘못된 것(자유시장, 비민주적 기구·제도들)에는 도전을 감행하는 그러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민주적인 해결책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해 최고 헌법제정회의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관은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요구를 집중시킬 거대한 초점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노동자운동이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제정회의가 유로화 및 유럽중앙은행의 진로(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가져다 놓는)를 결정하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현행 개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춰 헌법으로 보장하라!”

헌법제정회의는 또한 유럽의 주요 은행들과 금융센터들의 (무상) 국유화를 포고하고, 모든 실업자들을 흡수할 공공사업 계획을 내

국영은행으로 통합 집중시켜야 한다.

각국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기존의 24시간 또는 48시간 시위성 파업을 공장과 직장을 멈춰 세우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전면화 일 변화시키고 고조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무기한 총파업으로 긴축과 삭감을 자행하는 정부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기술관료와 금융전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 대표자들의 평의회에 기반한 정부를 세워야 한다. 노동자정부라면 어떠한 강령을 실행할 것인가?

노동자정부는 일체의 긴축 계획들을 폐기할 것이다.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국가부채 상환을 거부할 것이다. 은행 및 금융사 등 수탈자들을 수탈하고 1% 기생충들의 사적 소유를 몰수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상플랜 기금을 조성하여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공급하

고 만신창이가 된 공공서비스를 새롭게 재건하고 학교와 병원, 공공주택을 지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30년으로 만연한 불평등을 바로잡고,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처할 프로그램을 곧장 가동시킬 것이다.

일국 경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노동자운동 내 이러한 환상 유포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유럽 경제를 통합시키기 시작했지만, 자본가들 자신들은 그 과정을 완성할 수가 없는 일국적 민족적 계급이다. 그 완성을 위해 노동자계급은, 긴축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만들어질 노동자평의회와 여타 대중투쟁기관들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이 필요하다. **혁명**



지난 11월 30일 250만명이 참가한 영국 노동자 파업

한국판 ‘점령운동’, 쌍용차 희망텐트촌 건설을 위하여

김명석

2011년 12월 7일, 19명의 쌍용차 희생자들의 합동위령제 개최와 함께 개시된 쌍용차 희망텐트촌 투쟁은 12월 23~24일 1박2일의 희망텐트촌 1차 공장포위의 날 집중투쟁으로 결실을 맺으며 이어질 투쟁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열악한 환경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이 모여 텐트를 세우고 “죽음의 공장을 점령하라!” 라고 외치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냈다. 작년 한 해를 대중투쟁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희망버스에 이어 한국판 점령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판 점령운동이 시작됐다.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는 헤어날 기미는커녕 공황으로 더욱 빠져들며 각국의 노동자 민중들을 위기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깊어가는 세계경제 대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급대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의 공격은 세계적 규모의 아래로부터 대중투쟁과 체제 도전적 반자본주의투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 투쟁들은 서로에게 영감과 영향을 주면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민





스운동이 보여준 사회적 연대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점령운동과 희망버스운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중의 직접행동과 사회적 연대투쟁이다.

반자본주의 투쟁



희망텐트투쟁에 돌입하며 쌍차지부 동지들은 “희망버스운동이 한진의 정리하고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정리하고 자체를 만들어내는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올바르게 진단한다. 이어서 “정리해고를 만드는 구조와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체제에 도전하는 투쟁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희망버스운동이 대중들의 자발적 연대를 이끌어 내며 한진중공업의 정리하고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야권연대 세력의 준동과 이들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 해보려

중혁명으로, 남유럽에선 대규모 시위와 노동자 정치총파업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심장부인 미국에선 “1%에 맞선 99%의 저항” 점령운동이라는 대안적 투쟁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양상은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버스라는 자발적 연대투쟁으로 나타났다. 쌍차 동지들이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금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추동한 것은 19명의 죽음과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국가와 자본에 맞선 대중 직접행동인 ‘점령하라’ 운동의 자극과 희망버



이들은 희망텐트운동이 고양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이미 폐기된 86 합의를 슬그머니 꺼내놓고 투쟁을 분열시키며 기세를 잠재우려고 할 게 뻔하다

는 금속노조 상층부의 기만성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기만적인 국회권고안 마련의 길을 터 준 점, 기만적인 국회권고안이 제시되었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한 점, 이후 정리하고 철회, 원직복직이 아닌 기만적인 국회권고안에 따른 1년 내 재고용안을 받아들이고, 김진숙 동지가 내려오면서 결국 한진문제 해결로 투쟁이 종결된 점 등은, 쌍차동지들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이 투쟁을 정리해고를 만든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계급대중들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열망을 표현하는 반자본주의 투쟁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계급대중들은 투쟁을 통하여 고양된 자신들의 혁명적 힘을 믿기보다 야권연대 세력과 이에 편승한 금속 상층부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러한 위험은 희망텐트 투쟁 앞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지금이야 쌍차 문제가 표로 연결하기엔 아직 뜨거운 감자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반MB 야권연대/선거심판론 세력의 준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들은 희망텐트운동이 고양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이미 폐기된 8.6 합의를 슬그머니 꺼내놓고 투쟁을 분열시키며 기세를 잠재우려고 할 게 뻔하다. 이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의 전망을 확고히 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다시는 이들의 입 밖에서 8.6합의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다.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

1%에 맞선 99%의 저항으로 일컬어지는 점령운동은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정치운동이고 반자본주의 운동이다. 한편으로 수평적이고 열린 투쟁공간을 전제한다. 꼭 물리적 공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 자본 독재에 반대하는 99%들이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자발적인 투쟁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다. 관료적이고 박제화된 노조의 수직적인 지침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대비된다. 희망텐트투쟁이 내포한 함의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점에서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의 활동과 투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총회

다음은 노동자 참가단 블로그 참여 안내 글 인용이다.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지침을 수행하는 수준의 운동을 뛰어넘어, 대중 스스로의 자발적 행동을 추동하고 조직하는 활동을 지향합니다. 대중들의 민주적인 총회(집단 토론)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직접행동을 지향합니다.”

노동자 참가단은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조직노동자들의 자발적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50여명의 현장조합원을 노동자 참가단으로 조직했다. 쌍차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금속노조 지도부가 전국도 아닌 수도권 확대간부 참가 지침으로 300여명의 초라한 동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숫자다. 중요한 건 머릿수보다도 지침에 의한 수동적 참가가 아닌 투쟁 의의에 공감한 아래로부터 적극적 연대라는 점이다. 이 점은 부문행사 일환으로 열린 대중총회 방식 “이야기 마당”에서 잘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하며 현장의 다양한 쟁점과 투쟁과제를 토론했다. 투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민주적이고 대중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참여와 책임, 단



지난 12월 23일 쌍용차 희망텐트촌에서 진행되었던 노동자참가단 전체 집담회 모습

결과 연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지역의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모여 민주적인 대중총회를 통해 지역총파업을 결행하여 물류와 항만을 마비시켰던 미국 오클랜드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 정세

노동자 참가단 블로그 글을 한 번 더 인용한다.

“쌍용차를 시작으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정리해고가 쌍용차에 그치지 않듯이, 쌍용차 투쟁은 전국 노동자의 투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착취와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 노동자의 투쟁에 몸과 마음으로 결합하며, 노동운동에 활력을 제공하고 계급투쟁 전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희망텐트투쟁이 점령운동을 표방한 이상 반자본주의 지향을 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단기적 전망과 목표 속에서 실천적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차피 쌍용차 희망텐트투쟁의 요구는 단시간에 물리적인 타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쌍용차 희망텐트투쟁의 확대를 위해 대중총회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에

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은 자신들의 현장과 공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투쟁요구를 갖고 만나야 한다. 2012년 정세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며 이에 조응한 대중 직접행동은 더 큰 규모로 확산될 것이다.

2008년 세계대공황 초입부터 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지배계급이 써왔던 구제금융이나 양적완화 같은 정책 수단은 효력이 끝났다. 구제금융은 재정위기만 불러올 뿐이다. 2차례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외교마찰만 불러올 뿐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의 정책 수단이 없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배계급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도 더욱 적나라하게 말이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복지, 임금삭감 공격이 몰아칠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의 목숨 건 대규모 저항이 곧 뒤 따를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조금 늦추어졌을 뿐이다. 예상되는 정세가 이러함에도 노





조 지도부들과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들은 여전히 야권연대/ 선거심판론을 들먹이며 모든 문제 해결을 2012년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야권연대/선거심판론을 딛고 99%들의 직접행동으로!

공황기엔 설사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들이 집권한다 해도 개량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자본의 위기 전가에 앞장 서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그리스도 재정위기로 자본의 위기 전가에 앞장섰다가 대규모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닥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총

리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선거에 대한 기대나 환상을 걷어내자. 우리의 요구를 직접행동으로 쟁취하자.

다가오는 정세국면은 쌍용차 희망텐트투쟁 같은 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 대중 직접행동이 솟구쳐 오를 것이다. 현재 해고자 원직복직, 단협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1,480여 일째 천막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재능 지부동지들이 있고,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내기도 오히려 사측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동지들이 있다. “밤엔 잠 좀 자자”는 정당한 요구도 오히려 해고와 가압류, 노조 파괴, 구속 등 탄압으로 일관하는 사측에 맞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유성기업 동지들이 있다. 그 외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쟁취, 민주노조 사수,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반대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나아가 등록금 문제, 실업문제, 주택 및 노점 철거 문제 등 소외되고 억압 받는 학생, 청년, 철거민, 노점상 등이 있다. 이들의 모든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하자. 곳곳에 희망텐트촌을 건설하자. 선거에 목숨 거는 개량주의 의회주의 세력들을 제끼고, 99% 직접행동 10대 요구를 가지고 투쟁에 나서자. **혁명**

99% 직접행동 10대 요구

-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노동제를 통한 실업 해소!
- △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한미FTA 폐기!
- △ 물가 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 △ 등록금 폐지, 대학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 은행 및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반격하자! 투쟁하자!

최병승(현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12년 1월 4일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 3지회는 12월 21일 오후 5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이행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지회가 1년을 주춤하고 있는 사이 사측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로펌 1위(김&장)과 2위(광장)를 선임하고, 지노위에 압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조작하여 불법파견을 은폐하려고 있다. 또한 전경련 로비문서를 통해 확인되듯 국회의원 로비를 통해 불법파견과 관련된 노동법 개악,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

고 현장에서는 생관 외주화, 차량 변경에 따른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사측은 지회 조직력을 파괴하고, 내부를 분열시키면서, 불법 파견 투쟁의 재 점화를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측의 분열책동에 말려들어 투쟁이 중단되고, 시기를 놓치고 있다.

작년 12월 16일 대의원대회를 연기하고 2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제한된 내용을 결의한 것이 최근의 대표적 사례이다. 예초 10월 20일 총회의 후속조치로 논의하기로 한 지회 정상화, 해고자 출입보장, 지노위 판정에 따른 대응 투쟁은 새롭게 구성된 비상대책위 체계 구성 이후로 미뤄졌다. 결국 2012

년 불법파견 투쟁의 포문은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양재동 상경투쟁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혼란은 어디에서 왔나?

지회는 2010년 겨울 ‘25일’ 파업 이후 2차 파업이 좌절되고 나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내부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혼란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조합비 횡령사건, 지회 집행부의 부재, 해고자와 공장별 간부들의 갈등, 사측의 폭력적 탄압 등 혼란의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지회의 ‘불법파견 투쟁기조’를 흔들면서 전술방침의 혼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혼란의 기원은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없다는 점과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집행력을 세우지 못하는 지회 내부에 있다. 작년 12월 16일은 이 문제가 가장 극심하

게 표현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의 기조를 계승하고,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집행부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12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나?

작년 12월 16일은 부산지노위 노숙투쟁 3일째였고, 3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회를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여, 해고자 출입보장과 지노위 판정 이후 투쟁을 결의하려 했던 날이다. 그러나 지회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지회 대의원대회를 연기했다.

첫째, 사측의 꿈수인 지노위 ‘화해’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부산지노위 심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측은 공식적으로 3차례 화해안[1차 15명, 2차 29명, 3차 36명 복직]을 제시했다. 지회는 제시안이 제출될 때마다 전체 논의를 진행했고, 사측의 의도대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이

로 인해 판정 이후 후속투쟁을 세우지 못했다.

‘화해’안을 둘러싼 논의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다. 1차 제시안이 제출되었을 때 ‘화해’ 자체를 거부하였다면, 늦어도 2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라도 ‘



‘화해’ 거부와 투쟁을 논의하였다면 지회는 1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을 결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1차 논의에서도, 2차 논의에서도 제시안을 수정하며, ‘화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에 3차 논의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지회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접수한 이유는 부당징계 부당성을 알리고, 징계조정을 위한 개별행동을 막고 부당징계 투쟁을 집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노동법에 보장된 현장출입을 활용하지는 취지도 존재했다. 즉, 노동위원회 대응은 조직의 단결을 도모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회는 이러한 기초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배치하지 못했고, ‘화해’가 제안되고 난 이후에는 ‘화해 제시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투쟁과 계획 논의를 중단해 버렸다.

이에 대한 근본문제는 지회 내부에 있지만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에 법률 대리인이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1차 제시안이 나왔을 때 법률 대리인은 “90%이상 각하(기각)될 것이며, 중노위에서도 패소가능성이 높다. 화해



8대 요구

를 한다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해고자 복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화해 조정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기간 지회와 투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로서 법률대리인이 자신의 입장을 제출할 수 있고, 지회 핵심 활동가들을 만나 설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법률원은 주장과 설득은 있었으나 조직 문제와 화해 수용여부는 지회가 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지회는 두 차례의 논의를 통해 “해고자 전원 복직과 징계자 전원 원상회복”이 수용되지 않으면 ‘화해’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지회의 결정이 난 이상 법률대리인은 이 결정에 맞는 투쟁을 준비했어야 했다. 왜? 부산지노위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지, 현재 변경되지 않은 행정지침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노위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은 16일 또 다시 “분위기가 안 좋다. 원청은 전체 각하되고, 하청도 일부 승소라고 한다. 이럴 바에는 화해를 수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며, ‘화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농성을 하고 있던 한 동지가 “법률원 못 믿겠다. 판정 승소할 수 있다. 판정받자”고 얘기한 것에서 확인하듯 법률대리인은 판정 분위기를 먼저 알 수 있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화해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결국 대의원대회는 연기되고, 쓰레기 같은 판정에 대한 투쟁은 조직되지 못했다. 그리고 ‘화해’ 수용을 둘러싼 해고자간의 감정 대립으로 단결은 훼손되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는 부산지노위의 이종대 역할을 자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지회가 ‘화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회는 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까지 연기했다. 이는 지회가 ‘25일’ 투쟁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온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로 대표되는 8대 요구와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투쟁기조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요구한 것이었다. 다행히 16일 저녁 북구비정규직센타에서 진행된 해고자·징계자 모임에서 지회의 요구와 투쟁 기조에 변

합이 없음을 확인하고, ‘화해’를 거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2012년 불법파견 투쟁의 포문을 열어 아하는 1월 투쟁은 축소되었고, 본격적인 투쟁을 비대위 체계 구성 이후로 미뤄야 했다.

둘째, 금속노조가 지회 총투본 전환을 거부했다.

3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의 목적은 투쟁 계획 확정과 투쟁체계의 구성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임시 체계(비대위)에서 임시 체계(총투본)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총투본은 규약에도 없다”는 이유로 지회의 총력투쟁본부 전환에 반대를 표명했다. 분명 지회집행부를 세우지 못한 것은 지회가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문제이나 집행부가 없다는 이유로 총투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금속노조가 집행부가 없어서 총투본 전환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지회를 사고지회로 처리하고, 금속노조 차원의 지회 정상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1년 동안 적극적인



정상화 지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집행부 구성을 이유로 지회 체계변경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규약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금속노조 규약에는 지회 임원 전원 유고시 운영위를 통해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6개월 이상일 경우 보선을, 6개월 이하일 경우는 직무대행 체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지회는 2월 사퇴 이후 보선을 진행했지만 찬반투표에서 떨어졌고, 다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운영하고 있다. 즉, 노조의 규약에 위배된 운영을 한 적이 없다. 만일 위배되었다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새 지도부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적사항일 것이다. 그렇다고 규약을 이유로 비대위는 인정하고, 총투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속노조 규약 어디를 찾아봐도 비상대책위라는 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특정 시기 노조는 다른 형태의 기구로 체계를 전환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의대책위원회이다. 즉, 지회가 불법파견 투쟁의 재 접화를 위해 투쟁력을 집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또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였다면 대의원대회 공고 이후 노조에서 직접 지회를 방문해서 간부들과 왜 총투본 전환이 잘 못된 것인지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절차도 없이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투쟁을 결의한 지회 간부들의 결의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속노조가 지회의 투쟁을 통제하려 한다는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¹⁾ 이는 금속노조 박상철 집행부 당선 이후 규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무려 4년간 활동한 금속비투본을 해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금속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회는 총투본 구성을 하지 않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연기했다. 만일 지회 집행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것이며, 금속노조의 납득할 수 없는 반대도 없었을 것이다. 지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불법파견 투쟁의 시작도 늦어지고 있다.

셋째, 투쟁을 책임 있게 결의할 동지가 없었다.

위의 두 문제가 존재했다고 해도, 투쟁을 책임 있게 결의할 동지가 있었다면 대의원대회는 연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

1) 이호 미비국장이 당일 대의원대회 참관을 위해 내려왔다. 그러나 지회가 총투본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대의원대회를 연기하자, 총투본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던 간부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판단된다. 또 금속노조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양재동 상경투쟁 준비 과정에서 지회가 "금속노조가 1월 11일 지원할 물품을 10일 날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금속노조는 "1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일 날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준비한 비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도 이후 투쟁을 책임 있게 결의할 동지가 없었다. 총투본도 공동대표로 운영되어야 할 상황이었고, 금속노조의 반대로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비대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즉, 16일 이전에 제출되었던 두 개의 투쟁제안서에 대한 검토, 확정, 집행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지회가 중심을 세우지 못하자, 기조도 흔들렸고, 쓰레기 같은 화해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금속노조의 터무니없는 억측도 뚫고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작년 12월 16일 벌어진 이 해프닝은 지회의 혼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혼란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시급한 지회 집행부의 선출과 투쟁계획의 수립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화되는 사측의 공세.

지회의 혼란을 확인한 사측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산지노위 판정, 법원의 현장 검증에 대비한 현장조작, '25일' 파업 이후 민·형사 사건의 신속한 집행을 진행했다.

특히 민형사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는 상상을 초월했

다. 무려 200여명에 대한 형사벌금은 무려 8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식기소자도 30여명에 이르며, 무려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되고 있다. 2010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통장가압류를 선물하더니, 2011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벌금 8억원을 선물한 것이다. 또한 현장검증도 전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1공장을 배제하고, 2공장이 선택되었다. 하청업체만 사용하는 별도공구함을 만들고, 간식을 업체 조반장이 지급하고 있으며, 표준작업서를 변경 하는 등 현장을 조작하고 있다.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사측은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내부의 단결을 훼손시키기 위한 갖은 공작을 펼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회는 빠르게 비대위 체계를 정비하고,



2011년 5월 전주 비정규직지회 징계저지 투쟁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회 집행부를 세워내고, 공세적인 불법파견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은 투쟁을 배치하자!

첫째, 해고자 출입 투쟁과 현장조직화 사업.

해고자 전체토론을 통해 조합출입 투쟁을 결의하고, 공세적인 진입시도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장별 현안문제에 대해 선전하며, 내부 조직화를 병행하면서 해고자 출입투쟁과 현안문제 투쟁을 연결시켜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회 선전물의 정기배포가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실사에 대한 대응 투쟁.

1월 13일 현장 실사가 예정되어 있다. 사측은 현장을 조직하고 있지만 지회는 통일된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나마 지회 1공장사업부는 소자보를 통해 ①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진과 동영상 채증 ②사측의 조작을 확인한 당사자의 진술서 확보 ③새로운 조작에 대한 신고 등을 대응 지침으로 마련한 상태이다. 지회는 현장실사가 확정된 2공장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1·3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대응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현장실사단에 지회 사업부대표나 비대위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현대차지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지노위 판정, 민·형사 사건 결과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폭로와 여론화 사업.

아직 판정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부산지노위의 판정은 보나마나 기본도 없는 궤변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지회는 법원의 판정을 뒤집을 수 없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가 없는 부산지노위의 판정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폭로해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투쟁에 대해서는 100억원의 손해배상과 8억원을 육박하는 벌금, 30여명의 정식기소를 하면서도, 1만 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잔업·철야 강요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정몽구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고, 정몽구 구속 처벌에 대한 여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회 집행력 선출과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와 집행.

현안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비대위 체계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1년을 겪으면서 확인한 것은 투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단위가 필요하며, 이는 지회 집행력의 구성으로 표현된다. 2012년의 정세로 볼 때 어떠한 이유로든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시급히 지회 선거를 진행하고 투쟁을 집행하자! **역명**

[재능 거리특강] 0.5평 비닐 텐트 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황지수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이 1월 28이면 1,500일이다. 햇수로 5년차. 모 언론사에서는 재능지부 교사 투쟁을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재능자본은 재능지부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서, 투쟁주체들에 대한 전방위 탄압으로 일관하고 했다. (재능자본의 악랄한 노동탄압은 <<혁명>> 12월호 창간준비 4호 유명자 지부장 인터뷰 참조)

**시청 옆 비닐 텐트 농성장은
투쟁주체의 거점이자
연대 확산의 거점**

노동자 투쟁에서 거점 투쟁 공간 없이 어떻게

계 전략과 전술을 짜고 전진할 수 있을까? 이 불 한 장을 덮어쓸 공간이 투쟁의 주요한 무기다. 시청 광장 재능 사옥 앞 비닐 텐트 0.5평 농성은 도시의 매서운 찬바람과 입김이 교차하면서 비닐이 얼어붙는다. 이 조그마한

농성장이 바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얼마든지 단체협약을 쟁취할 수 있고, 유예기간 없이 해고자 전원이 원직복직 할 수 있다.”는 비타협적 투쟁의 거점이다. 또한 투쟁주체의 의지를 모으고, 연대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비닐 텐트 농성은 노동자 투쟁의 자존심이자 투쟁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공간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장소다. 그

래서 재능 비닐텐트 농성을 엄호하고, 이 투쟁정신을 확산시키는 것, 연대투쟁의 힘이 뻗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노혁추는 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매주 화요일 <재능 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거리강연 투쟁을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실천과 이론의 통일은 투쟁현장에서 만나야 한다. 여기서 2011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재능 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다섯 강사의 거리강연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 강연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첫 번째 강연 : “지금은 세계대공황이다. 이 사회의 모든 공장·생산수단·기계·토지를 모든 사람이 소유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김수행 교수)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강연에서 “지금은 세계대공황이다. 이는 1900년대를 시발로 세 번째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1930년대 대공황인데 당시 공황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아닌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극복된다. 두 번째는 1974년 석유가격 폭등(오일쇼크)으로 발단되었는데, 모든 원자재가 엄청난 투기로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침체로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만연시킨 대공황을 말한다. 여기서 1976년 영국에서는 대처가, 1980년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정권을 잡으면서 신자유주의가 대두됐다”고 시대 규정을 내렸다.

이어 김 교수는 이번 공황의 기본적 특성을 “신자유주의는 경제정책 면에서 산업자본보다는 금융자본을 유치한다. 금융활동은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자꾸 털어, 부가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옮겨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다 투기는 (정권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결과에서 보듯 지금 가계폭락을 통해 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교수는 “지금 지구 전체가 불황에 빠져 있다. 따라서 긴축해놔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2010년 5월 그리스 등지에서 국제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서민들은 덕 본 게 하나도 없고 은행들과 부자들만 덕을 봤기에 부채는 은행과 부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긴축정책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대안은? 김 교수는 “월가 점령시위의 주장은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자본주의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대기업이나 전부 모든 국민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유럽 전체에서 ‘유럽 사회주의 공화국’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서 오늘부터 노동시간을 8시간이 아니고 5시간으로 단축하고, 모든 직장에서 부족한 인원을 고용하라고 하면 실업자 현상은 금방 없어진다.”라고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이어 김수행 교수는 “자꾸 이란을 침공한다

는 얘기도 나오고 북한 얘기도 나오는 등 전쟁 위험이 있는 시기다. 우리는 야만적인 전쟁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이 사회의 모든 공장·생산수단·기계·토지를 모든 사람이 소유해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연을 끝냈다.

두 번째 강연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노동과 투쟁이라는 관점 없이는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 박준성 (역사학 연구소)

박준성 역사학자는 “슬라이드로 본 노동운동사” 거리특강을 통해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볼 것인가, 노동과 투쟁이라는 관점 없이는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해방 관점에서 볼 것을 주문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친일가요 가운데 이 광수가 작사하고 흥난파가 작곡한 ‘희망의 아침’은 1938년 조선방송협회가 펴낸 [가정가요] 제1집에 실려 있는 행진곡풍의 국민가요”라고 설명했다. 이 곡은 “일본 천황의 충실한 신민이 되어 대동아공영권을 확대하고 식민지 지배체제가 영원무궁토록 계속되는 세상을 ‘희망의 아침’이라고 하여 식민지 지배를 찬양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던 친일 자본가, 지주, 지식인들에게는 식민지 지배체제가 계속되는 것이 희망의 세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빼앗긴 나라의 노동자, 농민, 빈민들에게는 결코 희망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만 그러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슬한 거짓 희망이 강요되고 있다.

또한, 박준성 선생은 1991년 걸프전 파병 의료지원단 사진을 비교하면서,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사이의 편집 시각과 초점의 차이를 다루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장교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과 뽀뽀를 하거나 젊은 아내와 작별 포옹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데 반해, 한겨레신문은 출병인 병장에 초점을 맞추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찍어 보여주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진은 어디 가볍게 출

장을 떠나듯 ‘갔다 와도 되겠네!’ 하는 느낌이 들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남의 나라 전쟁터에 굳이 군대까지 파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군대를 파견하면서 정부는 남의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군대까지 파견하는데 무슨 노동운동이야 하면서 탄압의 고삐를 죄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몇 년 전까지 서울 지하철 을지로 입구 역, 롯데호텔 대각선 저편 건물에 이 김홍도의 타작도가 벽화로 그려져 있었다. 박 준성 선생은 “지주는 빠지고 일하는 농부들만 그려놓았다. 어차피 베껴 그리는 그림인데 왜 온 그림 그대로 살리지 않고 지주는 뺐을까?”라고 문제의식을 말한다.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지하철을 타려는데 비스듬히 누워 감독하는 지주를 보았다고 하자. 열 받고 화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조선사회 지주제의 모습에서 자본주의 사회 모습까지 읽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놓고 치먹는 놈들 따로 있고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놈의 세상 뒤집어엿던지 같아엿던지...”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럴까 봐 뻘쭙지. 한편으로는 ‘저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 봐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면서 근로의를 붙어 넣으려고 일하는 농부만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는 반 토막 난 벽화에도 이렇듯 정치와 선전이 담겨 있다”고 박준성 선생은 지적한다.

세 번째 강연 : “사자(자본가)가 들소(노동자)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들소를 분열시킨다. 겁을 먹게 한다. 달리기 경쟁을 시킨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물음을 던진다. (이시백 소설가)

이시백 소설가는 전직교사다. 자신도 “춘치 받지 말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교육을 주장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이 필요한가?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시백 소설가는 강

연에서 두발 권리 쟁취 사례를 얘기했다.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최초로 노조를 만들 때 싸움은 현대 중공업 정문 앞에서 두발 단속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청와대 앞에서 “내 머리를 깎지 마시오.” 노컷운동을 펼치면서,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면서 두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150kg 무게의 사자가 1,000kg 이 넘는 들소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사례를 들었다. 사자는 떼 지어 있는 들소를 분열시키고, 겁을 먹게 하고, 달리기 경쟁을 시킨다. 이때 사자는 뒤쳐진 들소를 잡아먹는다. 문제는 안 잡혀 먹는 들소들의 표정이 평온하다는 것이다. 이시백 소설가는 “자본주의 승자독식의 시대, 왜 우리는 들소처럼 정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비유하면서 노동자가 “나만 아니면 된다.(안 잡혀 먹는 들소의 평온한 표정)” 는 사고를 질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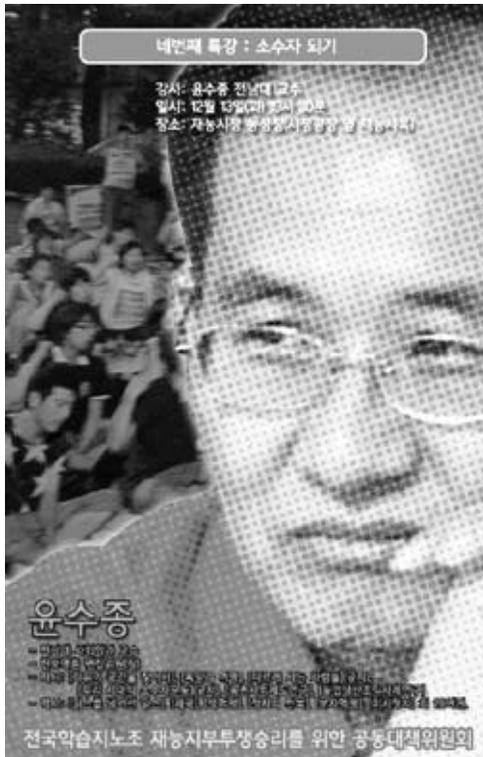
이어서 그는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라고 물음을 던진다. 현 정부의 몰락이 과거의 역사적 사례와 비슷하다고 예를 들었다. 권력이 몰락했던 시대에는 첫째, 힘없는 시인을 옥에 가둔다.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둘째, 중국 수나라 때처럼 강에 배를 띄운다, (4대강 사업) 셋



째, 종교가 타락한다. (정치권력과의 밀착)

그렇다면 들소는 사자를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가? 방법은 같다. 권력을 분열시키고, 경쟁시키고, 사자를 겁먹게 해야 한다. 돈의 권력에 넘어가지 않는 것, 들소의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번째 강연 : “소수자 운동을 위해선 당사 주주의가 중요하다. 권력화한 노동운동과 위계 질서를 없애는 것, 스스로 주체가 돼서 미시적 관계망을 연결하는 운동이 필요.” 윤수중 (전 남대 교수)



윤수중 교수는 ‘소수자 되기’ 강연을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소수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는 운동을 했다”고 말한다. 얼굴을 가리는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경찰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사회 안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 조직 안에서 스타화 된 내부권력 경향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조직에서 스타화 된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스타화 된 권력에 위임하게 된다.”고 문제 삼는다. 다시 말해 “내부 스타화 된 중심 권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수중 교수는 “노동세계에서 중심을 깨는 방향, 다시 말하면 가장 주변적으로 생각되는 노동 쪽으로 방향을 돌리자!”고 한다. 다양한 노동으로 나아가다 보니 소수자운동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5년 전만 해도 전혀 얘기되지 않던 성노동 개념이 등장하였고, 성매매 여성도 노동자로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성매매를 없애자는 반성매매운동에서 성노동자운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통적인 노동 개념에서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노동으로 포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노동으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윤 교수는 “어디까지 노동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노동자운동의 폭이 넓어지는데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 그러니까 노동을 자본에 고용된 임금 받는 활동으로만 보려

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만을 노동으로 규정하려는 생각은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층이 증가하면서 점차 바뀌어나가게 된다고 한다. 윤수중 교수는 이렇게 해서 도달하는 주체가 소수자 운동이다. 사회 운동을 확장하는데 현재 소수자 운동이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운동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안에서도 소수자적인 성격을 강조하면 그 노동운동이 잘되고 다수자적인 성격을 강조하면 그 운동은 권력화 되거나 대표화 되거나 국가장치화 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윤수중 교수는 “소수자 개념을 약자가 아니라 표준화된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운동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조직의 위계적인 질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에서 소수자적인 속성들이 미시적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강연 : “노동자의 파업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

하종강 선생은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정의’



강연에서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극단적인가를 설명했다. 일상적으로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노동자 된다”라든지, 범인 인상착의를 다루면서 “노동자풍”이라는 단어가 은연중에 들어가는 한국사회야말로 노동자의 기본권리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유럽사회에서는 일반화된 파업권의 불가침 권리”가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하종강 선생은 세계노동기구(ILO) 서문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가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약자의 삶과 권리를 보호해줘야 개인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곧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노동자임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하종강 선생은 “이를 위해서 노동자가 선택한 길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는 것이고 더 큰 단위로 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노동조합의 기본이고 존재 이유다. 노동자는 단결을 무기로 자본과 권력에 맞선다. 자본가는 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뭉친다. 노동자 역시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단결하고 단결의 구심은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힘이 약자에 대한 횡포로 둔갑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종강 선생은 “약자에 대한 횡포는 부도덕한 자본과 권력의 전유물이지만 신성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재능 특수고용직 투쟁의 사회적 연대. 실천과 이론의 만남.

재능 농성장 거리 강연은 지난해 11월부터 △ 세계 대공황과 자본주의 미래 △ 슬라이드로 본 노동운동사 △ 노동자가 지켜야 할 자신의 권리- 사자는 들소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 소수자 되기 △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정의. 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왔다. 추운 겨울 냉기가 올라오는 콘크리트 바닥에, 적게는 25명이 많게는 60여 명이 매주 재능 농성장 앞에서 “재능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 이

끝나지 않는 투쟁에는 맑스주의 학자, 노동운동가, 소설가, 노동교육 활동가 등의 거리강연과 함께 다양한 정치적 생각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1,500일 투쟁을 앞두고 ‘투명인간’ 노동자투사들의 목소리가, 재능 특수고용직 투쟁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까지, 현장투쟁에서 실천과 이론의 만남은 2012년에도 계속된다. **역명**

2012년에도 쭉옥~계속 됩니다.

재능 거리 농성투쟁 1500일이 오기 전에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새해를 맞아 "거리특강 : 학습지 선생님들의 투쟁, 재능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는 쭉옥~ 계속됩니다. 1월에는 다음과 같이 거리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재성
(소설가)

배성인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규진
(사회실천연구소 연구원)

1월 3일 정성진 교수 - "2012년 한국경제위기 진단과 전망"

1월 10일 안재성 소설가 - "재능농성장에 나타난 2012년 경성트로이카"

1월 17일 배성인 교수 - "김정은 체제에서의 한반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대응"

1월 31일 최규진 사회실천연구소 연구원 - "미정"



거리특강 전속가수 이썬 동지

매서운 추위에 얼어 붙은 손가락을 연대의 열정으로 녹여가며 매주 노래공연 합니다.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68년 레이건과 대처의 백악관 정상 회담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에 올라 “신자유주의 혁명”에 착수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트로츠키는 1920-30년대에 자본주의 위기에 휩싸인 유럽에 대해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자본주의 위기로 계급들 간의 사회적 균형이 교란되면서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이 (중간계급은 좌로뿐만 아니라 우로도 이동한다) 급진화되고, 이것이 정당들 간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 이 투쟁들의 패배 또는 승리가 다시 다음 국면의 도전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



트로츠키

일 급진화된 노동자계급이, 필요한 투쟁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자본주의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에 의해 이끌린다면 노동자들의 저항은 위축되고 패배를 겪을 것이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중도좌파” 정당들은 긴축을 실시하여 자신의 전통적 투표자들(빈민, 공공부문 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연금생활자 등)에게 타격을 가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실각하게 된 것이다. 트로츠키가 “노동자계급에 기대어 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하는 정당”이라고 표현했던 사민주의 정당들은 이미 지난 1백 년 동안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다.

유럽의 지배계급들은 국가부채 위기에서 벗어나 미국 및 중국과 계속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국 노동자들에게 때로는 부분적 개량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만이 지난 2년간의 제한적인 경제 회복으로 자국의 강력한 노동자계급과의 대결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여유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

한 시기의 종말

1950-60년대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상승



2005년 슈뢰더의 아젠다2010에 반대하는 시위 모습

독일을 예로 들어보자. 독일사민당의 슈뢰더는 1998년 녹색당과의 연립내각을 통해 총리 자리에 올랐다. 16년 동안 권력 밖에 있었던 사민당이 이제 개혁조치들에 다시 착수할 것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반대로 슈뢰더는 2003년부터 “어젠다 2010”이라는 이름으로 연금과 실업급여를 낮추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일련의 공격에 착수했다. 슈뢰더 집권 당시에 실업자가 400만 명이나 됐다. 그리고 집권 말기인 2005년에는 그 수가 500만에 이르렀고, 실질임금은 멈춰 섰다.

2005년 9월 총선 패배 이후에도 독일사민당은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중도우파 기민당과 연립정부를 지속했다. 2009년에는 1백년 내에 가장 낮은 23% 득표율을 기록하며 마침내 연립정부에서도 쫓겨났다. 사민주의가 독일 자본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까먹는 것이었다.

대가를 치르다

2007년 위기가 처음 출현한 때부터 지금까지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패배에 패배를 거듭했다. 2008년 4월 이탈리아 사민주의 정당인 민주당(구 이탈리아공산당)은 부패한 언론 재벌 베를루스코니에게 또 다시 굴욕적인 참패를 맞보아야 했다. 무솔리니 시절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 의회에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복지국가 모델로 유명한 스웨덴 사민주의도 만년 집권당의 지위를 마침내 잃어버렸다. 사상 처음으로 보수당이 2006년에 승리하였고, 2010년에는 더 큰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다.

2006년 총선거에서 네덜란드 노동당의 핵심 지지층 1/4이 이탈하면서 간신히 20%대 득표를 넘겼다. 2010년 4월 헝가리에서 신자유주의 우익정당인 피데즈(청년민주동맹)이 2/3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헝가리 사회당을 몰아냈다. 2006년 42% 득표에 190석을 차지했던 헝가리 사회당이 2010년 19.3% 득표에 58석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파시스트당인 조비스당의 16.67% 득표, 47석에 근소한 차로 겨우 앞선 것이다.

최근에 독일사민당 당수인 시그마르 가브리엘은 슈피겔 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사민주의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들 지도부가 정색하며 싫어하는 것 -- 전투적인 계급투쟁 -- 에 달려 있다.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지난 60년간의 사회적 성과를 되 빼앗고 파괴하려는 자본의 기도에 맞선 저항이 솟구쳐 이것이 지속가능한 총파업들 -- 지난해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 로 나아간다면 유럽의 보

수우파 정부들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노동자들에 의존하면서 자본가계급에 봉사하는 당들이 제 역할을 다시 한 번 수행하도록 호출될 것이다. 자신들의 노동계급 지지자들의 힘을 분산시키고 사기저하로 몰아넣어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그 역할 말이다. 또 한 번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투쟁을 위한 대안인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길로 나서자. **역명**



지난해 총파업에 참여한 이집트 노동자들

[연재 4]
**중국에서의 마오주의의 환상과
적색 테러**

오세철

1. 들어가며

《공산주의 흑서 (Black Book of Communism)》에서 중국 관련 부분을 쓴 장-루이 마골린(Jean-Louis Margolin)은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분석이 두 배나 중요하다고 하면서 1949년 이래 베이징 정권이 붉은 깃발 아래 사는 인민의 3분의 2를 지배했고, 1991년 소련이 몰락하고 동유럽이 그들의 ‘공산주의’를 포기했을 때에도 인민의 10분의 9를 지배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베이징은 1960년 중·소 분쟁 이후 맑스주의-레닌주의의 제2의 로마였지만, 실제로는 대장정 이후 연안의 자유지역 탄생 이후(1935-1947)였다는 것이다.¹⁾

중국에서의 계급억압과 테러, 그리고 중국식의 파시즘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지난번 〈연재 3〉 소련 분석에서 견지했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맑스주의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맑스주의 사상과 실천으로부터 유리된 문화, 이데올로기와 사회심리적 조건들을 검토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를 개관하는 데는 1927년 노동계급의 패배까지의 중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사와 그 이후의 반혁명,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 시기(1923-1933)를 명백하게 구분할 필

1) Jean-Louis Margolin, “China: A Long March into Night”, in Stéphan Courtois et al.(eds.) 「The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s, Terror and Repres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464쪽

요가 있다. 노동계급의 패배 위에서 건설된 이른바 “중국인민혁명”은 중국의 농민 대중을 제국주의 전쟁에 봉사하도록 한 부르주아 신비화였다. 한 마디로 중국 혁명 과정은 전(前)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부터 임노동에 기초한 국가자본주의와 같은 것으로 가는 이행에 불과했다.

중국공산당(CPC) 내에서 마오의 정치적 흐름은 1930년대에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반혁명의 중간지점이었다. 마오주의는 노동계급을 압살한 반혁명으로부터 출현했다는 것을 빼놓고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오의 공산당은 그 후 부르주아지의 근본적 이해에 봉사했다. 마오는 코민테른 상임위의 퇴행에 따르는 경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기회주의 세력의 일부분이었다. 1927년 3월 상하이 봉기가 국민당 군대에 의해 유혈로 억압당한 날, 그리고 CPC의 혁명 세력이 치절하게 국민당과의 동맹을 끝내려고 하는 동안, 마오는 장제스를 칭송하고 국민당의 행동을 인정했다.²⁾ 1928년부터 노동자는 더는 집단으로 당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이 더는 공산주의당이 아닐 때 적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농민과 룬펜프롤레타리아트가 당에 들어왔다.

‘중국인민혁명’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반제국주의적’이고 ‘혁명적’ 서사시로 기술

된다. 그러나 실질적 목적은 십여 곳에 흩어져 대지주와 투쟁하던 농민 게릴라 세력을 정규군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대장정이 마오에 의해 조직되고 지도되었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다. 마오는 와병 중이었고, 대장정을 준비하는 기간 왕밍(?明)의 분파에 의해 고립되어 있었다. CPC와 적군의 유일한 결속요인은 “돌아온 학생들”(러시아 유학생 또는 볼셰비키)이 제시한 소련의 제국주의 정책이었다. 그것은 스탈린 체제의 정치, 외교 및 군사적 지원에 전적으로 달렸었다.

1936년과 1945년 사이의 일본과의 전쟁 기간 동안 옌안에서 마오는 공산당과 적군을 지배하게 되는데, 세 단계를 거친다. 옌안 기지 창설 그룹의 제거, 마오 분파의 강화, 그리고 왕밍 분파와의 공개적 갈등이다. 이른바 ‘시안 사건’의 배경은 장제스가 포로가 되었을 때, 스탈린의 압력으로 CPC와 국민당의 새로운 동맹을 협상하라는 미끼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동맹은 명백하게 부르주아적이며 제국주의적이었고, 결국 소련정부나 장제스 사이의 군사 협정으로 끝난다. 적군의 주요부대(제4 및 제8)는 장제스의 군대에 통합된다.

1941년 독일군대가 소련을 침공하고 스탈린은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것을 피해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그에 따라 국민당

2) Report on an investigation into Human peasant movement, Mao Zedong, March, 1927

에 대한 소련의 군사지원은 끝났지만, 일본이라는 적과 협력한 책임을 지고 공산당 내의 왕밍의 스탈린주의 분파가 몰락한다. 10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을 통제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당과 공산당(특히 마오 분파)이 모두 미국에 접근하게 하였다.

마오는 ‘돌아온 학생들’에 대한 전면 공격을 단행하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정화 운동”을 한다. 마오는 이들을 “중국에 맑스주의를 적용하는 데 교조적이고 무능력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숙청도 1943년 정점에 달했는데, 코민테른의 공식적 해소와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대한 미국의 중재와 맞아떨어졌다.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틀 속에서 “정화 운동”은 공산당이 미국에 접근하게 하였다. 이는 마오 진영의 부르주아적 본질을 의미할 뿐이었다.

1945년 4월 숙청이 “공식적”으로 끝남에 따라 마오와 그 분파가 당과 군을 통제하게 되었고, 마오는 당 주석이 되었으며 마오주의, 즉 “마오쩌둥 사상”을 ‘중국에 적용된 맑스주의’로 선언했다. 여기서 우리는 마오주의가 어떻게 농민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중국사상과 접목하면서 인민과 영합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전통문화와 마오주의의 영합

중국에서 문화의 개념은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마오 사상 특유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문화는 밖의 세계를 인식하거나 개념화하는 방식의 구체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를 강화시키고 영속화하는 것이며,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올바른’ 방식으로서의 세계관을 의미한다.³⁾ 사상은 독립적 존재로서 맑스주의 상부구조 개념 안에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상은 반드시 경제적 토대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사회주의가 자동으로 프롤레타리아 사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인간의 정신 상태는 그가 사회계급에서 갖는 성원자격을 결정하는데, 맑스주의로 바뀐 부자는 프롤레타리아이며 옛날 관습에 매달리는 빈농이나 노동자는 부르주아에 해당한다. 모든 물질적 장애를 극복하는 주체적 능력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인간의 힘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인간 자원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문제와, 맑스주의와의 이론적 충돌을 가져온다는 점이며, 둘째는 유교와 신유교가 말하는 마음(心)의 개념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理)가 더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고 마음 자체라고 하는 왕양명(1492-1529)의 사상은

3) James Chieh Hsiung, 「Ideology and Practice: The Evolution of Chinese Communism」, New York: Praeger, 1970, 127쪽

이러한 ‘중국식 공산주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완전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념적 자기규율에 의해 평등주의가 유지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식과 행위의 통일(知行合一)을 주장함으로써 올바른 사상을 통해 객관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오 사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유교와 마오 사상의 차이는 마오 사상이 형이상학 체계가 아니라 당에 개인을 연결하는 수단이며, 신유교의 마음(心)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마오 사상은 투쟁의 수단으로 자연과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점이다.⁴⁾

전통 중국과 중국인민혁명 이후의 중국은 문화주의로부터 혁명적 민족주의로, 가족주의로부터 사회주의적 형식을 가진 집합주의로, 관료주의로부터 당의 규율로 바뀌었지만, 문화(이데올로기)가 수행하는 기능은 같다. 인민의 수동성을 생산적 에너지로, 가족에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변형시키면서 국민성의 나쁜 부분을 고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중국에서의 지성사를 더듬어 볼 때 독창성 보다는 전통의 종합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유교에서의 사회와 합리성에 대한 강조와 도가에서의 개인과 행동의 직감적이고 비합리성의 강조를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두 전통을 통합하려고 한 보기를 들 수 있다.⁵⁾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자의 태도를 이중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전통의 철저한 파괴로 해석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⁶⁾ 그러나 대체로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은 전통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서방의 논문에서는 권력투쟁으로 보는 견해,⁷⁾ 맑스주의를 중국문명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연한 현상으로 보는 견해,⁸⁾ 스탈린주의 같은 정치적 변태로 보는 견해⁹⁾가 있을 수 있다.

전통 중국에서 유교가 수행했던 문화 이념의 역할은 그대로 마오 사상에서도 수행됐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정치조직의 기반으로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제공하고 정치분석의 방법을 제공하며, 인민과 관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우선순위와 희망에 따라 사회를 결속시키며, 규범과 의사소통의 경로가 되고 행동

4) 위 책, 131-132쪽

5) Jean-Louis Margolin, 앞 글, 466쪽

6) Wang Hsueh-Wen, 「Legalism and Anti-Confucianism in Maoist Politics」, Taipei, Taiw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75, 이 책은 공자를 비판하고 진시황을 찬양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7) C.P. Fitzgerald, 「The Chinese View of Their Place in The World」, London, Oxford, 1964

8) T. Wang, “Power struggle in Peking: Plot and Counterplot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25, 1968

9) 맑스 이전의 프랑스 혁명가 루이 블랑키(1805-1881)와 같은 혁명적 낙관주의로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 제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⁰⁾

그런데 전통 중국 사상 중에서 유교와 도교가 강조했던 조화와 고요라는 유산은 버려야 할 유산으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보았다. 인(仁), 충성심, 이타심은 오히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다스리는 사람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조화시키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교에서 궁극적으로 반대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변증법 입장에서 배격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형제라는 대동(大同)은 유교의 슬로건인 동시에 공산주의적이고 사실로서 존재하는데, 이는 19세기 말 강유웨이(康有爲)가 부활시켰으며, 마오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먼로는 전통 중국 사회의 의식적인 유산으로서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초보적 유물론, 무신론, 그리고 미완성의 변증법을 들고 있는데, 음양 철학과 변증법은 비슷한 구조로 인식되기는 하나, 음이 양의 반대가 아닌 보완물이거나 반영으로 보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변증법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데 마오에게 모순은 사물 사이가 아닌 사물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무의식적 유산으로는 도덕적 훈련으로서의 교육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생각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¹¹⁾

도덕적 훈련으로서 교육이 지나는 의미는 기존의 규범에 대한 인민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데 중점을 둬으로써 통제를 내면화시킨다. 공자는 올바른 정신의 탈바꿈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왕양명(王陽明)의 지행합일과 마오주의 주의주의의 유사한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마오 사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론은 몇 가지 방식으로 실천에 의존한다. 첫째, 실천은 이론보다 우선한다. 실천적 활동의 원초적 국면은 생산이며, 사회적 실천은 계급투쟁, 정치활동, 그리고 과학적·예술적 추구를 포함한다. 둘째, 개별이론도 실천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사물에 대한 지식은 그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되기 때문이다. 셋째, 이론은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능력으로부터 인간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는 이론이 실천으로부터 나오며 실천을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 중국 사상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성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에 보존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맑스 이론이나 소련의 이론을 넘어서는 중국의 인간이해는 사람들의 개성과 능력이 무한

10) James D. Seymour, 「China: The Politics of Revolutionary Reintegration」, New York: Thomas Y. Crowell, 1976, 47-52쪽

11) Donald J. Munro, 「The Concept of Man in Early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 167쪽

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계급 내의 동질성에 대한 맑스주의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다. 인간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유교적이며 마오주의적 관점은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야 정당한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기 의무를 실행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 정당한가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결합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결합성은 세 가지 정신현상, 인식, 감정, 그리고 행동의지의 결합을 수반한다.¹²⁾

물론 결합성 속에 포함된 심리학적 사실들의 상세한 구성요소에 관하여 유교는 마오주의자들과 다르게 설명하지만 앎, 감정, 의지 등의 마음의 구성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있다는 믿음은 동일하다. 즉 현재의 중국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인식과 감정을 결합시킨다. 중국에서 심리적 사실이 계급의 표시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어떤 신념이나 감정이 본래부터 한 인간의 의식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인간의 계급의식이 많은 심리적 활동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자아개조라는 말은 도교와 유교의 ‘수신’과 자화(自化)라는 말과 비슷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외부의 교육기관에 순응하는 정도가 크지만, 전통 사상에서는 개인적인 의무에 의존하는 폭이 넓다는 점

일 것이다. 중국인의 입장은 올바른 사상, 소망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물질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교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중요한 속성, 즉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천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믿음은 국가 양성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 주었다. 따라서 인간에게 선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선천적인 결합이 없어서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치자들에게는 대중을 학습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유교에서 연약함 속에 강력함의 근원이 있다는 원칙은 외형적으로는 약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덕망 있는 통치자가 모범이 됨으로써 인민의 마음을 끌고 강대해 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인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고 보았던 것이다.¹³⁾

여기서 소련과 다른 중국적 특징은 대중노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양성의 개념과 같이 대중노선은 소련의 이념과는 모순된다. 또한, 중국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도덕 지식과 관계를 맺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을 한다는 점도 소련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국의 특징이다.

12) 도널드 먼로 지음(김덕중 옮김), 「현대 중국의 인간이해」, 서울:청사, 1982, 57쪽

13) 윗 책, 148쪽

또 하나의 유교의 전통은 정당성의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신유교에 있어서 성인(聖人)은 마음속에 사실과 가치가 항상 적절하게 결합하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그대로 중국에서 지속하였다. 하나는 홍(紅)과 전(專)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자들이 홍과 전을 이분법으로 보고 이를 대립적 관계로 파악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¹⁴⁾

“홍과 전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들의 융합이다. 그들은 밀접하게 연관되고 나누어질 수 없다. 그들은 서로 물리치지 않는다. ‘홍’은 정치이다. 그것은 모든 과업의 정신이고 지도자이다. ‘전’은 전문적인 직업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도구이고 무기이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그들의 위대한 효용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지식인이 발달시켜야 할 재질과 미덕을 결합하는 기준이다.”¹⁵⁾

송영배 교수는 유교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택동에게서 드러나는 ‘중국화 된’ 맑스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주체적 능동성(또는 혁명적 의식)’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교가 ‘모택동 사상’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유교의 ‘전통적’

사상이 모택동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유가 또는 2천 년 이상을 ‘유교적’으로 교육되어 온 중국인들에게는 사물들이 인간의 ‘주관적 윤리적’ 의지에 의해서 처리되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모택동에 의한 주관적 능동성의 강조는 전통적 유교사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후진적 경제상황과도 연관되며, 또한 그것은 사실상 상부구조, 생산관계 등에 우선적 의미를 주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모택동의 ‘주관적 능동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사회주의 건설, 다시 말해 물질적 생산, 사회 생산력, 과학 기술 등등을 촉진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필연적’이었고, 또한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¹⁶⁾

마오주의가 맑스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절충주의적 견해를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지적할 텐데, 이를 통해 우리가 검토한 중국의 전통사상과 문화가 오랫동안 중국인, 특히 농민의 심리구조 속에 뿌리박혀 있었고, 그를 중국 농민 혁명과정에서의 지배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마오의 전술이 대중에 영합하면서도 대중에 대한 무의식적 억압이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3. 마오주의의 본질과 중국혁명

14) Tu Wei-ming, “Confuciansim: Symbol and Substance in Recent Times”, R.W. Wilson, et al.(eds.) 「Value Change in Chinese Society」, N.Y.: Praeger, 1979, 23-25쪽

15) 도널드 먼로, 「현대 중국의 인간이해」, 196쪽

16) 송영배, 「중국사회사상사」, 서울: 한길사, 1986, 483쪽

처음부터 마오주의는 마오나 그 분파가 당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권력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마오는 국민당, 귀족, 군벌, 대부분 주아지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과 함께 전쟁에 당이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자본의 도구로서의 당의 새로운 정체성은 마오주의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렇게 마오주의는 제국주의 전쟁에서 애국의 깃발 아래 노동하는 대중(특히 농민)을 동원하는 부르주아 전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자 마오주의는 중국 '인민의 국가'의 공식 '이론', 즉 중국에 확립된 (국가) 자본주의 이론이 되었다. 국공합작을 했을 때 마오는 쑨원이 제시한 대로 민족 부르주아지의 이해에 종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쑨원의 1911년 '혁명적 민족주의'는 중국 부르주아지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감추려는 신비화에 불과했다. 결국, 마오주의는 공식적 스탈린 교본의 세속적 표현이고, 스탈린 반혁명의 이념적 체계를 적용한 것에 불과했다. 마오주의가 맑스주의를 어떻게 위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마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말할 때, 그것은 오직 '부르주아 혁명' 내에 존재한다. "1924-1927년의 혁명은 잘 정의된 강령을 기초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두 당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1924-27년 시기는 '민족 혁명'이 아니라 봉기의 지점에까지 이르게 한 중국 대도시의 노동계급의 혁명적 물결이었다. '북방 정벌'은 혁명적 승리가 아니라 도시를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학살하기 위해 고안된 부르주아지의 공작이었고 그 정점에 국민당에 의한 노동자의 학살이 있었다.

둘째,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라는 것은 1848년 이래 맑스주의의 원칙인데, 이는 마오주의에서 정반대가 된다. 그에게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는 같다. "공산주의 국제주의자는 또한 애국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국자이며 우리의 표어는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자에 대한 투쟁이다." (민족 전쟁¹⁷⁾에서의 공산당의 역할, 1938년, 10월).

셋째, 마오는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적 역할을 언급했지만, 계급투쟁에 대한 마오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착취계급의 이해를 착취계급의 이해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계급투쟁의 이해는 저항 전쟁의 이해에 종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급 사이의 관계에서 재조정의 적절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민족 전쟁에서의 공산당의 역할, 1938년, 10월)

넷째, 마오주의의 '맑스주의의 발전'은 저

17) 여기서 민족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다

개발국을 위한 혁명적 경로로 제시된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국가의 문제에서 드러난다. '신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지의 독재로 이끌지는 않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로 여러 혁명계급의 통일전선 독재로 이끈다.'라는 말은 중국에서의 제국주의자, 협조자, 그리고 반동분자의 지배를 패배시킬 수 있는 사회주의 혁명과는 다르다. 마오는 새로운 국가 유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계급의 도구가 아니라 계급 간 전선이나 동맹이다. 이는 계급지배의 형식일 수는 있지만 맑스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신민주주의' 이론은 인민 즉 모든 계급의 정부를 주장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유형이다. 이는 공산당의 통제 아래 여러 지역의 대다수 농민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다섯째, 마오의 '철학적 저작물'은 대학 서클에서 '맑스주의 철학'으로 가르쳐졌다. 그러나 그것은 맑스주의 방법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이다. 스탈린의 통속화에 의해 고무된 마오의 철학은 정치적 왜곡의 정당화일 뿐이다. 제국주의와 문제의 국가 사이의 모순은 주요 모순이 되고 국가 내의 다른 계급 사이의 모순은 잠정적으로 이차적이고 종속적 수준으로 격하된다. '대체된 모순'의 마오의 이론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족적 이해의 이름으로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적대적 계급은 제국주의 살육의 틀 안에

서 통일되고 통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착취 계급은 착취자의 이해에 굴복할 수 있고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요약하면 마오주의는 노동계급의 투쟁, 그 의식, 그들의 혁명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고, 맑스주의와도 관련이 없다. 즉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 발전의 내부 경향이 아니고 그 자체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혁명 원칙을 버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을 혼동시키고 가장 어수룩하고 편협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대체시킬 뿐이다.

그러면 마오 체제 아래에서의 국가 자본주의 발전단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마오의 슬로건은 농민 게릴라에 기초한 사회주의로의 새로운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노동계급 없는 농민혁명을 통한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실제로 마오의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기둥 중의 하나였다. 1949년의 마오 체제는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2단계 이론'이라는 스탈린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중국공산당은 농촌으로 나아가 이른바 '농촌 소비에트'를 세워, 도시 노동계급을 포기하고 농민을 포용함으로써 부르주아지와 동맹하는 급진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오의 농민 '적군'이 부패한 장제스 독재를 패퇴시킨 것은 몇 가지

유리한 조건 때문이었다. 소련의 스탈린 관료주의가 극동에 그들의 방패막이를 세우려 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공격으로 국민당 체제는 극도로 약화되었다. 그런데 스탈린이 기회주의적 동맹을 한 것은 장제스였다. 스탈린의 계획은 마오를 양쯔강에 멈추게 하고 장제스와 분할하기를 원했다. 토지 개혁 때문에 농민의 지지를 얻은 마오는 부르주아지에게도 대안세력이었다. 1949년의 '민주' 정부의 수립은 공산당이 십여 개의 부르주아 당과 함께 한 것이며, 사회주의 또는 노동계급의 정권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다.

마오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산업 대부분을 접수하고 관료적 계획 경제를 강제하면서, 1950년대 후반 자급자족 코뮌이라는 집단 농업의 강제라는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운동은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시 말해 혼합경제와 점진적인 자본주의 발전은 한국 전쟁으로 흔들렸고, 미 제국주의로부터 민족 혁명의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중공업을 통한 급속한 산업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명령경제와 국가자본주의를 활용하여 노동의 지시, 8등급 임금체계, 낮은 가격의 농산물 구매, 농민의 세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고, 노동자, 농민, 하급 관리의 소득을 최소화시켰

다. 다수 노동자를 위해 단 웨이(單位)체제¹⁸⁾와 '철밥통 정책'으로 복지를 해결하면서 잉여생산물을 중공업과 군비에 집중했다. 마오시대에 국민총생산의 30%가 투자되었고, 1957년에는 50%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산업화를 유지하는 계획은 전통적 중국 농업의 낮은 생산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 도시의 작업장을 특징짓는 사회조직의 형식인 단웨이 제도는 당과 국가에 노동계급을 포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현대 영농기술, 농업의 기계화에 기반을 둔 농업의 집산화는 부유한 '쿨락' 농민 계급을 출연시켰다. 공업화와 집산화의 '두 다리로 걷는다'라는 마오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은 대약진운동(1958-61), 문화혁명(1966-69) 시기를 제외하면 연평균 성장률을 10%로 유지했고, 중국을 세계 6위의 공업국으로 끌어올렸다.

요약하면 마오 시대는 제국주의 위협에 대항하는 민족 정체성의 유지나 노동자, 농민에 대한 높은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자급자족적 명령경제를 확립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로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오의 중국은 1930년대 근대화와 산업화를 향한 '제3세계'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1978년 자유시장 경제개혁으로의 이행은 수

18) 작업장 중심의 공동체로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서는 단웨이 체계를 통해 국가의 복지가능 대부분이 개별 국가-자본 또는 기업에게 양도되었다.

역의 중국 인민이 보건혜택을 못 받게 하고, 수천만의 실업자와 노숙자가 넘쳐나는 중국으로 변모시켰다.

4. 중국의 농민, 지식인, 그리고 관료주의

마오주의가 전통적 중국문화의 절충적 선택을 통하여 맑스주의의 원칙과 관련 없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된 데에는 절대다수의 인민인 농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마오는 맑스주의 원칙을 주장한 진독수(陳獨秀: 1880~1942)보다 농민이 중심이 되는 신중국 건설을 주장한 이대교(李大鈞: 1889~1927)에 더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장 큰 잘못은 빈곤한 농촌과 남루한 농민들의 실상을 외부세계에서 볼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아마 집안 문제를 숨기는 중국의 전통적인 허위의식에서 나왔거나 나쁜 일을 감추려는 공산당의 과장된 자존심에서 나왔을 것이다.¹⁹⁾

대약진운동도 그 목적이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않았고, 유토피아적 환상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 대약진을 향해 분투하는 과정

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약진이 실패하자,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확산하였는데, 이는 허황된 마오식 공산주의에 대한 징벌이었다. 농민들은 도둑질, 유랑, 진²⁰⁾향 단위 암시장 등과 같은 수단으로 정권에 도전하였다. 도시의 노동자에 기반을 둔 계급의식의 발전이 아닌 농민의식에 기댄, 유토피아 건설의 허황함이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이는 중국 농민의 근본 정서, 다시 말해 원시적인 아름다움, 세상과 동떨어진 한가함, 자급자족으로 근심 걱정 없는 농촌 생활을 하는 찬란한 몽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마오는 신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마오의 '학대재 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전국의 몇 억 농민들과 천만의 생산대가 대체와 같아지면 중국은 이 지상에서 공산주의 낙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마오가 말년에 저지른 실수인 문화대혁명도 지도자의 공적을 무조건 긍정하고 미신으로 발전시키며, 새로운 교조로까지 신성시하는 이상숭배와 봉건적 지배관계의 무의식구조가 뒷받침되었다고 본다.

1990년 설 후의 「인민일보」는 돈을 벌려고 일을 찾아다니면서 광주나 상해 등지의 기차역에 체류하는 농민이 수십만에 이른다고

19) L. 루이랑거 지음, 김용권 옮김, 「중국을 보는 제3의 눈」, 소나무, 1995, 53쪽

20) 향급행정구(鄉級行政區, 제4급)로, 향(鄉)이나 진 등으로 불린다. 영어에서는 향은 township, 진은 town으로 번역된다.

보도했다. 유민 물결이 사회의 화약고와 다름 없다고 보는 루이링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²¹⁾

“수십만 명이 부유하는 상황에선 서로의 공감으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강한 피해의식과 보복심리를 갖게 된다. 개개인의 이러한 정서가 뭉쳐서 지도자도 없고 목표도 없는 파괴적인 운동을 언제라도 촉발시킬 수 있다. … 그래서 이때 과격하고 종교적이며 반권위적인 사상이나 신념이 인간 의식의 깊은 곳에 아주 쉽게 뿌리내릴 수 있다.”

중국의 농민 범죄 가운데는 인질을 잡아놓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범죄율이 높고, 인신매매의 경우, 특히 여자를 팔아넘기는 범죄가 만연하여 중국 농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계급의식이 없는 농민을 중시하는 마오주의의 중국은 자연스럽게 반지성주의와 연결된다. 1957년 여름 ‘반우파운동’에서 중국의 지식인과 공산당 사이에 감정이 악화되었다. 물론 마오는 지식인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와 관용의 정신을 표현했지만, 결국 총칼로 정권을 획득한 농민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편협한 사고와 오만한 심리를 버리지 못했다. 마오의 제자이며 중국 공산당 원로 가운데 한 명인 가경시(柯慶施)는 중국의 지식인들을 다

음과 같이 평가했다. “첫째는 게으르다. 평소 그들은 스스로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꼬리만 치켜세운다. 둘째는 알팍하다. 사흘만 그냥 내버려두면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긴다.” 그가 지식인을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는 농민 출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공산당 내부의 성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²²⁾

루이링거는 중국 지식인의 민족의식에는 그 특수한 발전과정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으며,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고 보았다.²³⁾ 첫째는 인격의 독립성 결여이다. 군중을 향하고 세속을 향하는 경향이 짙다. 쉽게 과격해지고 외부의 선전에 좌우되며, 권위적인 지도를 갈망하고 권위를 보호한다. 따라서 모든 민중민주 운동은 똑같이 민주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둘째는 자율정신의 결여이다. 도덕 수양과 자주 의식이 없어서 중국 청년 지식인들의 단체 행동에는 저급한 도덕수준과 천연덕스런 위법성이 나타난다. 셋째는 정치 평등의식의 결여이다. 전체 사회의 정치적 평등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다. 1957년의 공산당 영도권의 포기 요구, 서단장(북경 서단대의 회색 벽돌담)의 삼권 분립 요구(1966년 대자보 유행), 1989년의 언론 개방 요구 등은 민주적 껍데기를 쓴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21) 윗 책, 95쪽

22) 윗 책, 112쪽

23) 윗 책, 191-2쪽

위한 것이지 전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이나 보편적 복리가 아니었다.

위와 같은 농민과 지식인의 특성은 중국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연결된다. 중국의 보수파 이론가들은 당대의 계급투쟁이 단지 마오의 신경쇠약성 의식 속에서만 존재했을 뿐, 결코 보편적 사회모순은 아니었다고 본다. 자신의 정신 질환도 치료할 수 없었던 마오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좀더 극단적인 견해에 따르면 당내의 계급투쟁과 간부의 부패 현상에 대한 마오의 두려움과 긴장은 강철, 강생 등이 그의 귀에 대고 설 새 없이 떠들어댄 결과였다는 것이다.²⁴⁾ 이는 마오가 상해 꼬뮌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의 관료주의는 상층보다 생명력이 더 강한 하층 소유 사회의 정치에 의해 좌우되었다. '우량화'는 '정화'로 바뀌었다. 권세가 있는 기층 지도자들은 이를 빌미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권력 환경을 정화하였으며, 자신에게 보복하려는 자와 권위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제거하였다. 권력은 우량화 된 이후 다시는 감독받지 않았다. 우량화 된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하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서방의 나라들은 법률상으로 권력에 대한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제도적으로 철저히 규정하여 권력이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은 관리들의 도덕적 양심을 믿고, 관리들의 사상, 도덕 교육을 중시하므로 권력을 감시, 통제하는 제도의 제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 이 때문에 권력이 이익에 유혹되고 매수될 기회가 서방국가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의심스러우면 쓰지 않고, 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중국의 용인철학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철학적 명언들은 비상품 사회에서 생겨난 것이고, 현재 중국은 상품경제 사회인 자본주의로 치달고 있기 때문이다.

루이링거는 1987년 중국의 맛보기 식 정치 체제 개혁이 대단히 어렵고 유감스런 일인데, 이는 덩샤오핑이 지도한 이 개혁의 진정한 어려움은 인민의 이익을 건드리면 인민이 반기를 들 것이라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인민이 물가, 정치, 자유화, 주택 등과 같은 것에는 양보할 수 있지만, 두 가지 기본요소, 사회주의 국가가 부여한 평균 수준의 생활보장제도와 심리적으로 획득된 주인의식을 굳게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다.²⁵⁾

24) 윗 책, 206쪽

25) 윗 책, 285-6쪽

5. 중국에서의 테러와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

1927년에서 1946년까지 중국 혁명은 테러와 분리될 수 없다. 1927년에서 1928년의 몇 달은 문화혁명의 시기와 맞먹는 ‘민주적 테러’ 체제의 확립시기였다. 썩 파이(P'eng P'ai)가 이끄는 중국의 농촌 소비에트는 반혁명분자인 지주에 대해 대대적 공개재판을 통해 대부분을 사형시켰다. “죽여라 죽여라”를 외치면서 희생자를 갈기갈기 찢었고, 요리해서 먹었으며 살아있는 가족에게도 먹였다. 이는 고대 동사이사의 전형인 복수축제의 열광이었다.²⁶⁾

1931년 총살당한 썩 파이는 군사화 된 농촌의 공산주의자였는데, 도시 노동자 운동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의 대안으로 자신의 농촌 소비에트를 주장했다며, 마오가 이를 받아들여 1927년 ‘후안에서의 농민운동 보고서’에 이론화되었다. 1949년 마지막 승리까지 중국 공산주의의 주요 모델은 국가 건설에 혁명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적을 분쇄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군사적이고 억압적 기구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1927년-31년까지 대략 18만 6천 명의 희생자를 낸 중국 소비에트의 테러는 스탈

린의 대테러(1936-38)보다 훨씬 먼저 벌어졌기 때문이다.

1946년에서 1957년 시기는 농업 개혁과 도시에서의 숙청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학살을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운동으로도 생각했지만, 마오는 1952년 11월 한국 전쟁에 중국 군대를 보내면서 그들을 성역화하기 위해 급진화 시기 동안 학살을 좋은 일이라고도 생각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반동분자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농업 개혁이라는 목적보다는 지식인, 부르주아지 소상인, 비공산주의 투사, 독립적 공산당 간부를 포함하는 모든 집단을 공산당의 전제주의적 통제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보고 대중운동을 통해 도시에서의 숙청을 확산시킬 목적이었다. 1949-52년 동안 공산당 공식 통계로는 2백만 명이 숙청당했다.²⁷⁾

1950년 7월에 시작하여 1951년으로 이어지는 숙청은 반혁명분자 제거운동으로 三反(반 낭비, 반부패, 반관료주의)과 五反(뇌물, 사기, 탈세, 거짓말, 국가기밀누설), 그리고 서구화된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개조’였다. 억압은 1955년까지 계속되었고, 특히 지식인을 겨냥한 “숨겨진 반혁명분자”를 제거하는 새로운 운동(sufan)이 전개되었다. 1957년 5월의 ‘벽화운동’은 마오가 몇 주간의 자유

26) Jean-Louis Margolin, “China: A Long March into Night”, in Stephane Courtois et al. 「The Black Book of Communism: Crimes, Terror, Repression」, Harvard Univ. Press, 1999, 470쪽

27) 윗 책, 476-477쪽

화 기간에 형성된 낙관주의를 파괴할 목적으로 일으킨 ‘독 있는 풀잎’ 제거였으며, 수만 명의 공산주의 지식인이 뒷에 걸렸고, 40만-70만의 간부(지식인, 기술자, 엔지니어)가 20년간 투옥되었다.

라오가이(Laogai 勞改)는 노동을 통한 인간개조로 그 시기 중국에는 1천 개의 대규모 수용소가 있었고, 유치장은 셀 수가 없었다고 한다. 수용소는 대규모 공기업으로 위장되었다. 라오가이는 마오가 수천만 인민을 눈멀게 한 블랙홀이라고 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5천만 명이 이 제도를 거쳐 갔고, 그곳에서 상당수가 죽고 매년 천만의 감금자(인구의 1.2%)가 있었다. 그들이 내세운 ‘새로운 인간’의 추구는 새로운 복귀 가능성이 없는 감금이었고, 세뇌 기법이 동원되었다. 개인 표현의 기회를 박탈하고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음식 덜 먹이기, 자유 시간 박탈과 개인 공간의 축소(과다 인원, 밤샘 조명, 사유물 금지) 등이 이루어졌다.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는 중국식 딱지 붙이기는 잘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체포되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체포는 공산당이 주도하고 마오가 통제하는 ‘인민 정부’의 경찰이 수행했다. 노동수용소

에서의 평균 음식량은 1개월 12-15kg의 곡물이었는데, 이는 19세기 프랑스 감옥보다 적고, 소련 수용소보다 적고, 1935-77년 베트남 수용소와 비슷했다. 비타민과 단백질 부족이 심각했다.²⁸⁾

1966년부터 1976년의 문화혁명은 무정부적 전체주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망자는 40만-100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100-300만이라고 주장한다. ‘역압적 반역’의 상징인 홍위병은 국가 기구를 공격하는 목표를 지닌 마오의 작품이었는데, 1966-67년에는 지식인과 정치 간부에 대한 폭력, 1967-68년에는 대결과 분파의 행위, 1968년에는 질서회복의 잔인한 억압 시기로 나뉜다. 홍위병은 14-22세 사이의 교조적이고 불만에 가득 찬 마오의 열광적 지지자들이다. “세계는 여러분의 것이고, 중국의 세계는 여러분의 것이다.”와 ‘당은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이들의 노래가 지니는 파시즘의 광기를 엿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반지성주의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홍위병은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슬로건을 반복했다. “자본가 계급은 피부다. 지식인은 피부에 자라는 털이다. 피부가 죽으면 털도 없다.”²⁹⁾

여러 번 자아비판을 했기 때문에 지식인은

28) 윗 책, 511쪽
29) 윗 책, 521쪽

저항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문화 혁명 기간 천8백만 간부 중 3-4백만이 투옥되었고, 인민 해방군 내에 홍위병을 금지했지만, 40만 군인이 투옥되었다. 지식인 가운데 14만 2천의 교수, 5만 3천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 500명의 의대 교수, 2천6백 명의 예술가와 작가가 투옥되었고, 그 중 대부분은 살해되거나 자살했다.

문화 혁명의 명백한 실패는 도시 거주자들이 정치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였다. 젊은 세대가 더욱 그러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조소, 범죄, 이기주의가 모든 곳에서 규범이 되었다. 중국인은 지쳤고 두려워했다.

유교 전통에서 마음의 평화는 선한 행동에서 오지 않고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한테서 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시아 공산주의에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이념의 과도한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즉 새로운 사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 유교와 공산주의의 조합 위에서 분류되고 재조직화하는 열광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개개인의 마음이 새롭고 더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러한 개인들의 행동은 새로운 지식에 근거한다는 생각에 의존함으로써 전 세계의 변혁을 꾀한다는 점이다. 결국, 그것은 말의 향연과 관념론에 빠지고 과도한 의지주의에 근거한 폭력과 열광으로 나아가 파시즘적 토대를 형성한다.

마오주의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6. 마오 시대 이후의 중국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과 노동자 계급의식

덩샤오핑의 '자유주의 시장개혁' 정책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마오의 '2단계론'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주의라는 머나먼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자본주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그는 '올바른' 마오 노선으로 공산당을 되돌린다고 항상 강조했다. 1970년대 말부터의 '시장개혁'은 생산을 지구화하는 넓은 과정의 부분이라고 보았다. 전후 시기 부르주아 운동은 '반제국주의' 수사학을 포기하고 값싼 노동기지로 중국을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까지의 시기를 덩시대의 1차 개혁으로 볼 수 있다. 마오 시대에는 보건과 복지의 개선이 있었지만, 첫째, 1950년 이후 대다수 노동자의 개인 소득이 오르지 않은 점, 둘째, '농민을 위한 교육'을 위해 청년을 농촌으로 보내는 인기 없는 정책의 포기, 당 간부 자녀의 도시 실업문제가 발생한 점이 드러났다. 1차 개혁 시기에는 소비재 공업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1980년대 말에는 1950년대 건설한 중공업의 내구연한이 끝나 중공업 시설도 새롭게 대체되어야

했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했지만 마오 시대의 명령 경제는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자유주의 개혁은 세 가지였다. 첫째, 특별기업지역(SEZ), 둘째, 중앙계획의 폐지, 셋째, 국가 금융 및 개혁의 재조직화였다. 핵심 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당과 국가 기구의 하급 수준으로 위양하여 이윤분배협정을 맺고 지방관리와 공장관계자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로 다시 경제에 대한 직접 통제로 전환된다.

1990년대 초 서구의 관측통은 동유럽의 개혁처럼 '시장사회주의' 단계를 거친 '자유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이용이 실패할 것으로 보았으나, 중국의 개혁 초기의 성공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다른 중국 특유의 당과 국가의 분권화 구조에 맞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잘 규정된 상법 등의 법체계 없이 사업에 필요한 상호신뢰가 중국의 전통적 '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성공 원인이다. 그 결과 1980년대 경제 개혁으로 나타난 자본가계급은 당과 국가의 틀 속에 포괄되었고, '관시'로 연결된 국가 관료주의에 종속되었다.

이 새로운 계급은 권위주의적 일당국가의 정치적인 '현상유지'를 방어하는 공통 이해를 지닌다. 일당국가의 지속적 지배와 중국 부르주아지의 응집성과 배타성 때문에 1990년대 초 이후 일어난 경제개혁에서 중국의 새로운 자본가 계급은 중심적 구실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동구 블록의 해체 중에 이루어진 천안문 사건으로 중국은 1차 개혁 물결에 느슨해진 중앙통제를 다시 강조하게 되었다. 중국은 단지 값싸고 복종적인 노동력 때문뿐 아니라 마오 시대와 덩 시대의 1차 개혁에서의 자본축적의 결과 비교적 발전한 동아시아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국유기업과 초국적 기업 사이의 합작이 이루어졌고, 이윤은 국가와 초국적 기업 사이에 분할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일당국가가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30년간 중국의 자유주의 경제 개혁은 경제 관계의 상품화와 화폐화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적 자본축적으로 통합됨으로써 거대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고 계급투쟁을 봉쇄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는 중국 정부(자본)의 능력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 자본축적에서의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 보면서 세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계혁명의 가능성과 세계전쟁을 통한 야만의 가능성을 모두 예견해야 한다. 1960년부터 미국 경제는 일본과 유럽에 자신의 기반을 침식당해 왔으며 1980년대의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것이 80년대 말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었고, 경제 성장은 채무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1990년 일본이 거품경제로 그 기반이 약화된 반면, 미국은 레이저노믹스로 점점 힘을 얻었고, 미

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높은 군사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산업이 동북부의 노조가 있는 제조 산업 중심으로부터 남부와 서부의 노조 없는 컴퓨터 산업으로의 이전은 1930년대부터 쌓아온 노동계급의 지위를 약화시켰다. 그 결과 임금이 유지되었고,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켰다. 1990년대 이윤율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후 경기 붐에도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부채 기반의 소비거품 때문으로 자본 축적의 취약성을 은폐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의 부실로 표현된 공황으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거대한 국가부채는 미국 자본주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아직 과학기술의 세계적 중심이며, 1980년대 구조조정에도 세계의 광범위한 산업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은 세계의 최대시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서유럽의 노동계급의 지위는 동유럽의 거대한 산업예비군의 통합으로 침식당하지만, 미국은 당분간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의 중심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자본축적의 재구조화의 본질은 세계경제 주변부의 이른바 ‘신흥공업국’에 생산적 자본을 재할당하는 것이었는데, 노동집약 산업으로 방직, 의류, 신발, 장난감을,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으로 정보통신, 컴퓨터를

분할했으며, 19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이 그리고 1990년대에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는 동아시아 상품 생산의 노동집약적 조립단계를 이어받으면서 아시아 자본축적에 진입한다. 1998년 이후 중국은 세계 시장을 향한 아시아 상품의 제조단계로 상승했다.

이윤율 저하와 선진 자본주의 내에서 투쟁적 노동계급 사이에서 짓눌려 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자본은 주변부의 값싸고 복종적인 노동력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신흥공업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인구, 50년간 급속한 민족자본의 축적, 그리고 값싼 노동력의 거대한 저수지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높은 사회적 생산성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의 합작기업은 중국 정부가 얻은 잉여 이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 노동력 착취수단의 증가는 생산수단의 원가 절감과 생존수단의 저렴화로 일반화된다.

중국의 출현과 지구적 자본축적에의 통합은 1970년대, 80년대 구조조정으로부터 촉발된 자본주의 재할당화를 연장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제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는 희소한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 대

안으로 불리는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정치, 사회적 환경과 전통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떠오르는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를 위한 중국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15년간의 수출지향을 통한 성장으로 새로운 공장시설, 원자재의 투입 증가로 나타났다. 2004년 중국은 세계에서 원유소비 7.4%, 석탄 31%, 철강 27%, 철광석 30%, 알루미늄 25%, 시멘트 40%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공업화는 거대한 수출단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초국적 기업과 서구시장(특히 미국)의 거대한 할인소매점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제너럴 모터스라면 지금은 월마트이다. 2002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10% 이상을 월마트가 차지하고 있다. 월마트는 한 편으로 중국의 수천 개의 노동착취 공장에서 이윤을 얻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노동자 사이의 공동전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매년 600억 불 이상이 수천만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로 이루어진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중국으로 쏟아지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거대한 노동예비군은 임금 인하의 지속적인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본질적 문제는 당면한 경제 문제보다 시장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재앙과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이다.

중국은 1949년 혁명으로 얻은 사회적 성과인 공공교육, 공공보전이 해체되고 있고, 탈규제화로 세계최악의 공해와 안전부재국이며,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생산국이다.

한 마디로 중국 자본주의는 노동집약적, 노동억압적, 불평등하고 무정부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자본주의이다. 부패의 만연, 알코올 중독, 매매춘, 모든 사회적 악이 1949년 이래 노동자의 독립적 역할을 억압했고, '시장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은 중국 자본가와 세계 자본 이해의 집단적 대리자이며 노동계급을 자본의 논리로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이다.

중국 노동계급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 규모가 커지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당과 정부를 앞세워 이 계급투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해 무자비한 억압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를 뚫고 일어나는 중국의 노동계급은 앞으로 세계혁명의 주요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투쟁을 통해 강화되는 계급의식이 민족주의로 변질하여 세계전쟁으로 비화하여 중국 노동자를 살육하고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중국식 파시즘의 나라로 떨어뜨릴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의 노동자 연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노동자 연대를 통한 노동자 국제주의를 통해 세계 혁명으로 진군하는 앞날을 기대해 본다 **혁명**

혁명

창간준비
1호

목차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왜 지금 혁명당 건설을 말하는가? - 고민택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 - 양효식

진보대통합, 처음엔 비극(悲劇) 이젠 소극(笑劇)! - 남궁원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 이형로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전선을 확대하자! - 구재보

자발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 - 김명석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 김병호

[기고] 장기투쟁사업장 : 이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 강종숙

[기고] 복수노조 시대 :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할 것인가? - 정현철

[자료] 사노련 항소심 모두진술문 - 오세철

혁명

창간준비
2호

목차

창간준비 2호를 내며

[희망버스] 자본주의 체제의 변호론이 된 진보 담론들 - 임천용

[820 희망시국대회]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민주대연합 제단에 바치다! - 김명석

[한진 중공업 해고자 인터뷰] 한진노동자, 청문회를 넘어 계속 전진!!

- 이용대 / 김병호

더블딕 우려? 이미 자본주의 체제위기! - 이민수

[유성지회 투쟁] 왜 패배했나?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 구재보

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 양재훈

리비아혁명 제1단계의 승리 : 혁명 전진을 위한 당면 과제들 - 양재훈

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 좌클릭? - 남궁원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 김병호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 - 오세철

[기고]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복수노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 김창연

[기고] 노동조합투쟁과 '사회주의자' 조직 - 김태훈

[독자비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발걸음에 든든한 깃발이 되길

혁명

창간준비
3호

목차

창간준비 3호를 내며

희망버스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명석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 - 양효식

사회주의 전면화만이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있다 - 고민택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임천용

광노현 사태와 부르주아 도덕 - 김병효

유성 조합원 인터뷰 - 엄기준, 엄선주 / 구재보

사노위 4차 총회 - 혁명정치를 폐기하고 조직을 유지하다 - 이성호

《혁명》, 작지만 명확한 원칙과 넓은 전망으로 출발하다 - 이형로

[트리폴리에서 보내온 글] 이것은 철저한 민중혁명이다 - 번역 / 양재훈

[연재 2]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계급무의식의 대립구조 - 오세철

[토론회 발제문]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 양효식

[자료] 사노련 항소심 결심공판, 오세철 교수 최후진술문

혁명

창간준비
4호

목차

- 〈혁명〉 창간준비 4호를 내며
- 당 건설 투쟁의 기초를 밝힌다 - 고민택
- [출범 축시] 혁명은 온다 - 임성용 시인
- 혁명강령으로 출발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이형로
- 유로존 위기와 세계대공황 2라운드 - 이민수
- 3자통합, 민노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최종적 파산 - 임천용
- 한미 FTA 반대 투쟁과 야권연대 - 이종범
-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 남궁 원
- 주간연속2교대 : 자본의 노림수를 박살내자! - 구재보5
- 희망버스운동 : 평가와 과제 - 김명석
- [기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1년을 돌아보며 - 박현재
- [간담회 후기] 현자 비지회 집회 신고투쟁 - 김병호
- 반혁명인가 계속혁명인가의 갈림길에 선 이집트 - 김병호
- [인터뷰] 재능지부투쟁 1500일을 앞둔 유명자 지부장
- [연재 3]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 - 오세철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 회원들이 말한다 - 이지윤, 김남명, 정현철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을 맞아 동지들이 보내온 메시지

혁명의 광고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활동을 통해 반드시 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동지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혁명의 깃대를 굳게 움켜 쥐고, 붉은기 높이 들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쟁취하여,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동지들! 더 이상 머뭇거림을 멈추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함께 합시다!

[후원 및 정기구독 계좌]

우리은행 1002-735-860549 (오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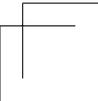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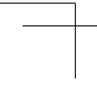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및 독자기고]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신청하시면 답메일을 드리거나 전화통화하여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jinbo.net/wrp>

혁명

창간준비
5호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발행하는 《혁명》은 사회주의자들·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살아 있는 정치선동의 무기가 되고자 합니다.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공급하고 계급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열린 토론과 논쟁의 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 편집자 글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중에서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